

2026년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 적용요령**



행 정 안 전 부  
지 방 세 제 국



# 목 차

## I 2025년 지방세 지출 재설계 현황

1. 지방세 지출 개관 .....	1
2. 2025년 지방세 지출 운영 방향 .....	2
3. 지방세 지출 재설계 현황 .....	3
4.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특례 신설·확대 .....	33

## II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 내용

1. 지방세 특례 정의 규정 명확화 등(법 §2①5의2·6, §4①, §75의3, §80의2) .....	39
2.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 예외 규정 정비(법 §4⑦, 영 §2⑧,⑨) .....	44
3. 임업후계자 등에 대한 감면 요건 추가(법 §8③) .....	48
4. 어업·양식업권 감면 세목 축소(법 §9③) .....	51
5.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별 감면을 축소 및 정비(법 §13②) .....	53
6. 지방농수산물공사 감면 연장 및 최소납부적용(법 §15②) .....	58
7.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법 §22) .....	61
8.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감면 연장(법 §23) .....	71
9.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자 확대(법 §31⑥) .....	73
10.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법 §33의3) .....	76
11. HUG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지방세 감면 신설(법 §34⑧,⑨) .....	80
12. 생애최초 주택 상시 거주 추정요건 완화 등(법 §36의3) .....	85
13.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법 §36의5) .....	92
14.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확대 및 연장(법 §46) .....	96
15.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법 §47의4) .....	110

16.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법 §54]	120
17. 벤처기업육성특정지구 내 벤처기업 감면 연장 및 재설계[법 §58④]	126
18.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법 §58의2①,②]	129
19.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감면을 축소[법 § 63①,②]	133
20.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감면 축소[법 § 63③]	136
21. 수소전기화물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법 § 66⑥]	138
22.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법 § 71①,②]	140
23.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법 §74, 법률 제19232호 부칙 제1조]	146
24.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 재산세 감면기간 설정 등[법 §75의2]	152
25.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법 §75의4, 영 §35의5]	156
26.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법 §75의5, 영 §35의6]	165
27. 빈집 정비를 위한 감면 신설[법 § 75의6]	180
28.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법 § 78]	183
29.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법 § 78의2]	197
30.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연장[법 § 81]	199
31.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정비[법 § 84]	202
3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법 § 85의2]	206
33.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등[법 § 90]	210
34.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조문 정비[법 § 167의3]	213
35.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법 §167의5, 영 §116조3 등]	215
36.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법 § 167의6]	220
37. 종과세율 적용 배제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법 § 180의2]	222
38. 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 신설[법 § 2, § 185, 영 § 128]	224
39. 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 특례 신설[법 § 186]	227

40. 감면대상 청년농업법인 연령기준 완화(영 § 5의2③)	230
41. 기회발전특구 등의 감면 대상 공장 범위 재설계(규칙 § 8, § 8의2)	232

### III 참 고 자 료

2026년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	245
-------------------	-----



## **I. 2025년 지방세 지출 재설계 현황**





# 1 지방세 지출 개관

## 1 개 념

- '지방세 지출'은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으로서 '비과세'와 '감면'으로 구분, 이 중 감면이 지방세 지출 재설계 대상
- ※ 비과세납세의무 배제(영구, 「지방세법」) ↔ 감면세부담 경감(한시, 「지방세특례제한법」)

## 2 현 황

- '24년 비과세·감면액은 **16.3조원**, 비과세·감면율은 **12.5%**
  - 비과세·감면율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목표\* 이내 관리
- \* 직전 3개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평균 + 0.5%p(「지방재정법」 §28의2) / '24년12.9% '25년13.0%
- 국세·지방세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감면의 효율화를 통해 감면율은 국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안정적 관리

< 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 지출 규모 및 비율 >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지방세	징수액 (조원)	102.0	112.8	118.6	112.5	114.1
	비과세·감면액 (조원)	14.9	15.7	16.8	16.2	16.3
	비과세·감면율 (%)	<b>12.8</b> (목표:14.3)	<b>12.2</b> (목표:13.8)	<b>12.4</b> (목표:13.3)	<b>12.6</b> (목표:12.9)	<b>12.5</b> (목표:12.9)
국세	징수액 (조원)	303.7	364.0	421.3	370.4	365.7
	비과세·감면액 (조원)	52.9	57.0	63.6	69.8	70.5
	비과세·감면율 (%)	<b>14.8</b> (목표:13.6)	<b>13.5</b> (목표:14.3)	<b>13.1</b> (목표:14.6)	<b>15.8</b> (목표:14.3)	<b>16.1</b> (목표:14.6)

## 3 운영 경과

-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 수립·국무회의 심의, 각 부처 통보(~2월)
- 관계부처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신설 건의 수렴(~3월)
-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심층평가 실시(100억원↑ 신설·일몰도래 감면, 2~6월)
- 지방자치단체 통합심사 실시(행안부·자치단체·지방세연구원, ~6월)
- 관계부처 사전 의견조회(7월), 「지특법」 개정안 입법예고(8~9월)

## 2

## 2025년 지방세 지출 운영 방향 ※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25.2.25. 국무회의 의결)

### ① 법정 목표를 준수

- 비과세·감면율을 법정 목표 내로 엄격히 관리하여 지방세 지출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
- 장기·관행화된 감면은 감면목적 달성도 및 효과 등을 분석해 정비 추진, 감면대상·목적의 구체화·세분화를 통한 과도한 감면 배제  
※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등 추상적·포괄적 목적 규정 정비

### ② 기본원칙에 따른 특례 재설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

- 지방세 지출이 지역 민생경제, 지역 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 고려
-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대상, 목적 등 유사 감면은 유사 혜택 부여  
※ 단, 유사한 경우에도 조세부담능력, 공익성 등에 따라 감면을 차등화 가능
- 국민개세주의,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도록 최소납부세제\* 적용  
\* 취득세액 200만원·재산세액 50만원 초과 시 면제세액의 15% 부담

### ③ 지출 성격과 세목 간 연계성 강화

- 확산·촉진 정책과 보호·지원 정책을 구분하여 적정 세목 선택
- 특정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 성격 세목 및 행정수수료적 성격인 등록면허세의 감면 종료·신설 배제

### ④ 일몰 원칙 적용 및 감면 조례 활성화

- 지방세 지출의 주기적 평가 및 재설계를 위해 일몰 3년 부여 원칙\* 운영  
\* 단, 유사 감면대상 간 일몰기한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1~2년 가능
- 지역별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법정 감면 사항에 대해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제도 설계  
※ 특정 지역의 특성 반영이 필요한 지출은 조례를 통한 감면 활용

### 3 지방세 지출 재설계 현황

※ (범례)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이하 "본 적용요령"에서 동일하게 적용

#### 1 농·어업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b>&lt;① 농지확대개발 및 교환분합 농지§8①②&gt;</b>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u>2025.12.31.</u>	<b>☞ 현행 3년 연장</b>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u>2028.12.31.</u>
<b>&lt;② 임업후계자 등 교환분합용 토지§8③&gt;</b> ○ (감 면 율) 취득세 100% (보전산지 : 취득세 50%) ○ (일몰기한) <u>2025.12.31.</u>	<b>☞ 일몰 3년 연장 및 감면 요건 추가</b> ○ (감 면 율) 취득세 100% (보전산지 : 취득세 50%) ○ (보전산지) <u>임업 직접 사용</u> 요건 추가 ○ (일몰기한) <u>2028.12.31.</u>
<b>&lt;③ 20톤미만 소형어선§9②&gt;</b>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u>2025.12.31.</u>	<b>☞ 현행 3년 연장</b>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u>2028.12.31.</u>
<b>&lt;④ 어업권·양식업권 취득·면허§9③&gt;</b> ○ (감 면 율) 취득세 100% <u>등록면허세 100%</u> ○ (일몰기한) <u>2025.12.31.</u>	<b>☞ 등록면허세 종료 및 일몰 3년 연장</b> ○ (감 면 율) 취득세 100% <u>등록면허세 종료</u> ○ (일몰기한) <u>2028.12.31.</u>
<b>&lt;⑤ 농협 등 용자 담보물 동기§10①&gt;</b>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u>2025.12.31.</u>	<b>☞ 현행 3년 연장</b>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u>2028.12.31.</u>

개정 전	개정 후
<p>&lt;⑥ 농어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13②&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매매사업 등(1호) : <u>취득세 50%</u></li> <li>- 생산기반정비(1-2호) : <u>취득세 50%, 재산세 75%</u></li> <li>- 경영회생지원(2호) : <u>취득세·재산세 50%</u> (농업인 환매시 취득세 100%)</li> <li>- 과원 규모화 사업(3호) : <u>취득세 50%</u></li> <li>- 농지시장안정사업(5호) : <u>취득세 50%</u></li> <li>- 그 외 사업(1-3호,4호,4-2호) : <u>취득세 25%~50%</u></li> </ul> </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감면율 축소 및 종료, 일몰 3년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매매사업 등(1호) : <u>취득세 30%</u></li> <li>- 생산기반정비(1-2호) : <u>취득세 50%, 재산세 75%</u></li> <li>- 경영회생지원(2호) : <u>취득세·재산세 50%</u> (농업인 환매시 취득세 100%)</li> <li>- 과원 규모화 사업(3호) : <u>취득세 50%</u></li> <li>- 농지시장안정사업(5호) : <u>취득세 30%</u></li> <li>- 그 외 사업(1-3호,4호,4-2호) : <u>종료</u></li> </ul> </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ul>
<p>&lt;⑦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의 유통시설등§15①&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u>취득세·재산세 50%</u></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b>현행 3년 연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u>취득세·재산세 50%</u></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ul>
<p>&lt;⑧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도매시장 관리 및 농수산물유통사업용 부동산등§15②&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u>취득세 100%*</u> <u>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100%*</u> (최소납부세제 배제)</li> <li>* 100% 이내 조례로 정하는 율 × 지자체 투자 비율</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b>일몰 3년 연장 및 최소납부세제 적용</b> ※ 최소납부세제 적용시기 유예 종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u>취득세 100%*</u> <u>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100%*</u> (최소납부세제 적용)</li> <li>* 100% 이내 조례로 정하는 율 × 지자체 투자 비율</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ul>

## < 개정내용 >

- (①) 농지 확보 등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면 연장
- (②) 산림보호·관리 및 임업 경제성 제고를 위해 감면 연장하되,
  - 임업 지원이라는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보전산지에도 “임업 직접 사용” 요건 추가

- (③④) 어업인 소득안정, 어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감면 연장하되,
  - 행정행위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등록면허세 감면 최소화 원칙에 따라 등록면허세 감면 종료
- (⑤) 농어민을 위한 지속 지원을 위해 농·수협 등의 담보물 등기에 대한 감면 연장
- (⑥) 농어촌공사가 농어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하되,
  - 담세력,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취득세 감면을 축소하고 및 감면 실적이 미미하거 농업과 관련이 낮은 사업은 종료
    - ※ 농지매매사업용(1호) 농지시장안정사업용(5호) 농지 : 감면을 축소(취 50% → 취 30%)
    - 조성토지 처분특례(1-3호), 생활환경정비 사업(4호), 농지 재개발 사업(4-2호) : 종료
- (⑦)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가격안정 등에 기여하는 점 고려 감면 연장
- (⑧)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가격 유지 등 공익성 고려, 감면 연장하되,
  - 타 감면과의 형평성 및 최소납부세제 취지 등을 고려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 유예 종료\*

\* 부칙(법률 제15295호, 2017.12.26.) 제7조

## 2 사회복지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p>&lt;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18&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b>현행 3년 연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ul>
<p>&lt;②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22&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등록면허세(등록분, 면허분) 100%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100%</li> <li>* 최소납부세제 적용</li> <li>○ (추징요건) 5년 이내 수익사업시, 3년 이내 해당용도 미사용, 직접사용 개시 후 2년 미만 매각·증여 또는 타 용도 사용시</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b>현행 3년 연장 및 사후관리 추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등록면허세(등록분, 면허분) 100%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100%</li> <li>* 최소납부세제 적용</li> <li>○ (추징요건) 5년 이내 수익사업시, 3년 이내 해당용도 미사용, 직접사용 개시 후 2년 미만 매각·증여 또는 타 용도 사용시, <u>3년 이내 법인해산 및 설립허가 취소</u> <u>3년 이내 폐지신고 및 시설폐쇄 명령</u></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ul>
<p>&lt;③ 법률구조법인 및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감면 §23①, ②&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25%, 재산세 25%</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b>일몰 3년 연장 및 한국소비자원 감면 대상 명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25%, 재산세 25%</li> <li>○ (일몰기한) <u>2028.12.31.</u> ※ <u>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소비자기본법」에서</u> <u>규정한 주된 업무로 감면 대상 명확화</u></li> </ul>
<p>&lt;④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면 §27①&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25%</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b>현행 3년 연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25%</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ul>
<p>&lt;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감면 §28②&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b>현행 3년 연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ul>

개정 전	개정 후
<p>&lt;⑥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면 §28③&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25%</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b>현행 3년 연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25%</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ul>
<p>&lt;⑦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감면 §30①&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b>현행 3년 연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ul>
<p>&lt;⑧ 공공매입임대§31⑥&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대상자) <u>LH, 지방주택공사</u></li> <li>○ (감 면 율) 취득세 25% · 재산세 50%</li> <li>○ (일몰기한) 2027.12.31.</li> </ul>	<p>☞ <b>감면대상자 확대 및 일몰 3년 연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대상자) <u>LH, 지방주택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u></li> <li>○ (감 면 율) 취득세 25% · 재산세 50%</li> <li>○ (일몰기한) 2027.12.31.</li> </ul>
<p>&lt;⑨ 신축 소형주택 §33의2&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대상) 신축 소형주택*</li> <li>*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 '24.1.10.~'25.12.31. 준공, 60㎡이하, 원시취득 限</li> <li>○ (감 면 율) 취득세 최대 50%<sup>(법25%+조례25%)</sup></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b>감면 종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대책에 따른 일시적 감면으로 일몰종료</li> <li>※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4.1.10.)</li> </ul>
<p>&lt;⑩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33의3 ①~③ : 사업주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대상) 사업주체 : 2년 이상 임대로 공급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li> <li>* '24.1.10.~'25.12.31. 준공, 전용면적 85㎡이하, 3억원 이하, '25.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 조건</li> <li>○ (감 면 율) 취득세 최대 50%<sup>(법25%+조례25%)</sup></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b>일몰 1년 연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대상) 사업주체 : 2년 이상 임대로 공급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li> <li>* '24.1.10.~'26.12.31. 준공, 전용면적 85㎡이하, 3억원 이하, '26.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 조건</li> <li>○ (감 면 율) 취득세 최대 50%<sup>(법25%+조례25%)</sup></li> <li>○ (일몰기한) <u>2026.12.31.</u></li> </ul>

개정 전	개정 후
<p>&lt;⑪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33의3④⑤ 신설 : 개인 구입자&gt;</p>	<p>☞ 감면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대상)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 수도권 외의 지역 소재, 전용면적 85㎡·취득가액 6억원 이하,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법인·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제외)하는 아파트로서 실제 입주한 기간(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입주한 기간 제외)이 1년 미만인 아파트</li> </ul> </li> <li>○ (감 면 율) 취득세 최대 50% (법25%+조례25%)</li> <li>○ (일몰기한) 2026.12.31.</li> </ul>
<p>&lt;⑫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34⑧⑨ 신설&gt;</p>	<p>☞ 감면 신설(§34⑧)</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대상자) 주택도시보증공사</li> <li>○ (감면대상) 2028.12.31.까지 매입하는 지방 준공 전 미분양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의 주택 중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수도권 외의 지역 소재</li> </ul> </li> <li>○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 100%</li> <li>○ (일몰기한) 2030.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납부세제 배제</li> </ul> </li> </ul> <p>☞ 감면 신설(§34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대상자) 사업주체</li> <li>○ (감면대상) 환매기간(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1년)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재매입하는 공동주택</li> <li>○ (감 면 율) 취득세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납부세제 배제</li> </ul> </li> </ul>



개정 전	개정 후
<p>&lt;⑬ 생애최초 구입 주택 §36의3&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범위 설명 없음</li> <li>○ (감면한도) 소형주택 외 : 취득세 200만원 소형주택* : 취득세 300만원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 전용면적 60㎡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li> <li>○ (추징요건)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중여·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li> <li>○ (추가 주택 취득 제한) <u>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상속 주택 제외) 추징</u></li> <li>○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u>임차인이 1년 이상 상시거주한 소형주택을 '24.1.1.부터 '25.12.31.까지 취득한 경우 추가</u></li> <li>○ (일몰기한) 2025.12.31.</li> </ul>	<p>☞ 상시거주 추징요건 완화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자 본인) 대한민국 국민인 성년자로 명확화</li> <li>○ (감면한도) 소형주택 외 : 취득세 200만원 소형주택* : 취득세 300만원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 전용면적 60㎡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u>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 취득세 300만원</u></li> <li>○ (추징요건) 생애최초 주택을 <u>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중여·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추징</u> *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 기간의 만료일(잔여 임대차기간 1년 이내 限)</li> </ul> <p>&lt;삭 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 종료</li> <li>○ (일몰기한) 2028.12.31.</li> </ul>
<p>&lt;⑭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에 대한 감면 §36의5&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100%(500만원 限)</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li>○ (추징요건) 3개월 이내 상시거주 미개시, 상시거주 3년 이내 매각·중여 또는 타용도 사용시</li> </ul>	<p>☞ 상시거주 추징요건 완화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100%(500만원 限)</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li>○ (추징요건) 해당 주택을 <u>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매각·중여 또는 타 용도 사용시</u> *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 기간의 만료일(잔여 임대차기간 1년 이내 限)</li> </ul>

## < 개정내용 >

- (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은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등을 통한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
- (②)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하되,
  -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법인 해산 또는 설립허가 및 사회복지시설 폐지신고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를 추정 사유로 추가하여 사후관리 강화
- (③) 법률구조법인의 법률구조사업 및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감면 3년 연장 등
- (④)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면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
- (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
- (⑥)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근로자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
- (⑦)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복지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
- (⑧)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LH와 동일사업을 수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감면대상자에 추가
- (⑨)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非아파트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일시적 감면 시행, 일몰 종료
- (⑩) 미분양 물량 해소 및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감면 연장

- (⑪) 미분양 물량 해소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개인 구입자에 대한 감면 신설
- (⑫) 지방 건설경기 유동성 지원을 위해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 완화를 위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
- (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을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 촉진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 지역의 감면한도를 확대하고 상시거주 추정 요건 완화 등
- (⑭)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은 출산율 제고 및 양육부담 완화·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 3년 연장하되
  - 납세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시거주 추정 요건 완화

### 3 교육·과학기술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div>&lt;①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46&gt;</div> <div>○ (감면율) 기업규모별 차등 및 신성장기술에 따른 추가감면</div> <table><tr><td></td><td>기본</td><td>신성장·원천기술 (+15%p)</td></tr><tr><td>대기업</td><td>취·재 35% (과밀억제권역外)</td><td>취·재 50%</td></tr><tr><td>일반기업</td><td>취·재 35%</td><td>취·재 50%</td></tr><tr><td>초기중견</td><td>취·재 50%</td><td>취·재 65%</td></tr><tr><td>중소기업</td><td>취 60% 재 50%</td><td>취 75% 재 65%</td></tr></table> <div>○ (추정요건) 1년(신·중축 대수선의 경우 2년) 이내 기업부설연구소 미인정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3년 이내 신성장기술 심의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 연구소 폐쇄 및 타 용도 사용시 추정</div> <div>○ (일몰기한) 2025.12.31.</div>		기본	신성장·원천기술 (+15%p)	대기업	취·재 35% (과밀억제권역外)	취·재 50%	일반기업	취·재 35%	취·재 50%	초기중견	취·재 50%	취·재 65%	중소기업	취 60% 재 50%	취 75% 재 65%	<div>☞ 감면대상 확대 및 3년 연장, 재설계</div> <div>○ (감면율) 기업규모별·지역별 차등 및 신성장·국가전략기술에 따른 추가감면</div> <table><tr><td></td><td colspan="2">기본</td><td colspan="2">신성장 및 국가전략기술 (+15%p)</td></tr><tr><td></td><td>수도권</td><td>비수도권</td><td>수도권</td><td>비수도권</td></tr><tr><td>대기업</td><td>감면종료</td><td>취·재 35%</td><td>-</td><td>취·재 50%</td></tr><tr><td>그 밖의 기업</td><td>취·재 30%</td><td>취·재 45%</td><td>취·재 45%</td><td>취·재 60%</td></tr><tr><td>중소기업</td><td>취·재 45%</td><td>취·재 60%</td><td>취·재 60%</td><td>취·재 75%</td></tr></table> <div>○ (추정요건) <u>정당한 사유 없이</u> 1년(신축의 경우 토지는 2년)이내 기업부설연구소 미인정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3년 이내 신성장 및 <u>국가전략기술</u> 심의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 연구소 폐쇄 및 타 용도 사용시 추정</div> <div>○ (일몰기한) 2028.12.31.</div>		기본		신성장 및 국가전략기술 (+15%p)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대기업	감면종료	취·재 35%	-	취·재 50%	그 밖의 기업	취·재 30%	취·재 45%	취·재 45%	취·재 60%	중소기업	취·재 45%	취·재 60%	취·재 60%	취·재 75%
	기본	신성장·원천기술 (+15%p)																																							
대기업	취·재 35% (과밀억제권역外)	취·재 50%																																							
일반기업	취·재 35%	취·재 50%																																							
초기중견	취·재 50%	취·재 65%																																							
중소기업	취 60% 재 50%	취 75% 재 65%																																							
	기본		신성장 및 국가전략기술 (+15%p)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대기업	감면종료	취·재 35%	-	취·재 50%																																					
그 밖의 기업	취·재 30%	취·재 45%	취·재 45%	취·재 60%																																					
중소기업	취·재 45%	취·재 60%	취·재 60%	취·재 75%																																					
<div>&lt;② 한국환경공단 직접사용 부동산§47&gt;</div> <div>○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div> <div>○ (일몰기한) 2025.12.31.</div>	<div>☞ 현행 3년 연장</div> <div>○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div> <div>○ (일몰기한) 2028.12.31.</div>																																								
<div>&lt;③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 §47의4&gt;</div>	<div>☞ 감면 신설</div> <div>○ (감면대상) 건축·대수선을 통해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포함)를 설치한 숙박시설 ※ 非의무대상 숙박시설 限</div> <div>○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 100%(2년, 이후3년간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div> <div>○ (일몰기한) 2028.12.31.</div>																																								

개정 전	개정 후
<p>&lt;④ 국립공원공단의 공원관리등 부동산§48&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b>현행 3년 연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ul>
<p>&lt;⑤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오염방제 등 부동산·선박§49&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b>현행 3년 연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ul>

## < 개정내용 >

- (①)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비수도권 소재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감면 확대를 포함하여 3년 하되,
  - 추정조문에 '정당한 사유'를 추가하여 사후관리를 합리화하고, 신축의 경우 비교적 공사소요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완화대상이 토지임을 명확화
- (②,④,⑤) ②한국환경공단, ④국립공원공단, ⑤해양환경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각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
  - \* ②환경보전정책 위탁 집행 및 환경오염 방지, ④전국 국립공원 보전, ⑤해양환경보호 및 긴급방제조치 등에 기여
- (③)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은 대형화재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의무대상 숙박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유인을 위하여 감면 신설

#### 4 문화·관광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p>&lt;①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취득 부동산 감면 §54&gt;</p> <p>○ (감 면 율) 취득세 <u>25%</u>(조례 +25%可)</p> <p>○ (일몰기한) <u>2025.12.31.</u></p>	<p>☞ 일몰 3년 연장 및 지역별 감면율 차등 재설계</p> <p>○ (감 면 율) 취득세 : <u>수도권 10%,</u>  <u>비수도권 25%,</u>  <u>인구감소지역 40%</u>  (조례 +25%可)</p> <p>○ (일몰기한) <u>2028.12.31.</u></p>

#### < 개정내용 >

- (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감면 연장 하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차등을 두어 감면율 재설계 및 3년 연장

## 5 기업구조·재무조정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p>&lt;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업무용 부동산 §56③&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감면 종료</p>
<p>&lt;② PFV 사업정상화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57의5&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50% ※ 「지방세법」 상 종과세율 적용배제</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현행 2년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50% ※ 「지방세법」 상 종과세율 적용배제</li> <li>○ (일몰기한) <u>2027.12.31.</u></li> </ul>
<p>&lt;③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內 벤처기업의 직접사용 부동산§58④&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u>50%</u>·, 재산세 <u>35%(+조례 15% 可)</u></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감면 재설계, 3년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율) 취득세 <u>수도권35%, 비수도권50%</u> 재산세* <u>5년 수도권20%, 비수도권35%</u> * 재산세 조례+15% 可</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ul>
<p>&lt;④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및 입주기업의 부동산§58의2&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 립 자 : 취득세 <u>35%</u>, 재산세(5년) <u>35%</u></li> <li>- 입주기업 : 취득세 <u>35%</u>, 재산세(5년) <u>35%</u></li> </ul> </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감면 재설계, 3년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 립 자 : 취득세 <u>수도권15%, 비수도권35%</u> 재산세(5년) <u>수도권15%, 비수도권35%</u></li> <li>- 입주기업 : 취득세 35%, 재산세(5년) 35%</li> </ul> </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lt;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교육시설용 부동산§59①&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25%</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감면 종료</p>

개정 전	개정 후
<p>&lt;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분양·임대용 부동산§59②&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감면 종료</p>
<p>&lt;⑦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자의 직접사용 부동산§59③&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0%(3년)</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감면 종료</p>
<p>&lt;⑧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60①&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50%</li> <li>※ (전통시장) 취득세 75%</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현행 3년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50%</li> <li>※ (전통시장) 취득세 75%</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ul>
<p>&lt;⑨ 지방중소기업센터의 직접사용 부동산 §60④&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현행 3년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ul>

## < 개정내용 >

- (①)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의 경우 정부 신용보증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타 출연기관\*\*과의 형평 고려 감면 종료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감면 종료('14)

\*\* 「지특법」§58의2③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감면으로 대체 가능  
(취·재 50% × 지자체 투자 비율)

- (②)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정상화 지원을 위해 현행 감면 2년 연장



- (③,④)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 감면을 재설계하면서 연장
  - 벤처육성촉진지구에 대해 지역별로 차등하여 감면율을 재설계\* 하면서 재산세의 경우 감면 기한 5년 적용
    - \* 수도권 지역 취득세 50% → 35%, 재산세 35% → 20%
  - 지식산업센터 시행자에 대해 지역별 차등 감면율\* 적용,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율은 현행 유지(취·재 35%)
    - \*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에 대해 수도권 지역 취득세 35% → 15%, 재산세 35% → 15%
- (⑤~⑦) ⑤⑥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⑦협동화실천계획 승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유사 기관과의 형평성, 타 감면과의 중복가능성 등을 고려 감면 종료
  - \* ⑤교육시설용 부동산의 경우 신규 취득이 없고, ⑥분양·임대용 건축물의 경우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내 소재로 중복 적용 가능, ⑦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은 협업화 중심으로 추진되는 등 감면 운영 실익이 적음
- (⑧,⑨)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측면을 고려 감면 연장

## 6 수송 · 교통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p>&lt;①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시설용 부동산§63①&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25%</li> <li>○ (일몰기한) 2025.12.31.</li> </ul>	<p>☞ <b>현행 3년 연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25%</li> <li>○ (일몰기한) 2028.12.31.</li> </ul>
<p>&lt;② 국가철도공단의 국가등에 귀속 철도 차량, 부동산§63②&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li> </ul> </li> <li>○ (일몰기한) 2025.12.31.</li> </ul>	<p>☞ <b>감면 축소 및 일몰 3년 연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종료) 반대급부 無 : 100%, 반대급부 有 : 50%</li> </ul> </li> <li>○ (일몰기한) 2028.12.31.</li> </ul>
<p>&lt;③ 한국철도공사의 직접사용 부동산, 철도차량§63③&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 취득세 2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li> <li>- 일반 철도차량 : 취득세 50%</li> <li>- 고속 철도차량 : 취득세 25%</li> </ul> </li> <li>○ (일몰기한) 2025.12.31.</li> </ul>	<p>☞ <b>감면 축소 및 일몰 3년 연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 취득세 25%, 재산세(도시지역분 종료) 50%</li> <li>- 일반 철도차량 : 취득세 50%</li> <li>- 고속 철도차량 : 취득세 25%</li> </ul> </li> <li>○ (일몰기한) 2028.12.31.</li> </ul>
<p>&lt;④ 도시철도공사의 직접사용 부동산, 철도차량 등§63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100%* (최소납부세제 배제) 등록면허세 100%*</li> <li>* 100%이내 조례로 정하는 율 × 지자체 투자 비율</li> <li>○ (일몰기한) 2025.12.31.</li> </ul>	<p>☞ <b>현행 3년 연장</b> ※ 최소납부세제 적용시기도 3년 유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100%* (최소납부세제 배제) 등록면허세 100%*</li> <li>* 100%이내 조례로 정하는 율 × 지자체 투자 비율</li> <li>○ (일몰기한) 2028.12.31.</li> </ul>
<p>&lt;⑤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고속철도차량 §63⑥&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25%</li> <li>○ (일몰기한) 2025.12.31.</li> </ul>	<p>☞ <b>현행 3년 연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25%</li> <li>○ (일몰기한) 2028.12.31.</li> </ul>

개정 전	개정 후
<p>&lt;⑥ 수소전기화물자동차 §66⑥&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50%</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b>현행 3년 연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50%</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ul>
<p>&lt;⑦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연구 및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 등§69&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25%</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b>현행 3년 연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25%</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ul>
<p>&lt;⑧ 물류단지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 부동산§71①②&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자 : <u>취득세 35%, 재산세 25%(조례 10%)</u></li> <li>- 물류사업자 : <u>취득세 50%, 재산세 35%(5년)</u></li> </ul> </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b>지역별 감면율 차등 및 일몰 3년 연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자 : <u>지역별 감면율 차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취 25% 재 15%, (비수도권) 취 35% 재 25% (인구감소지역) 취 50% 재 35%</li> </ul> </li> <li>- 물류사업자 : <u>지역별 감면율 차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취 35% 재 25%(5년), (비수도권) 취 50% 재 35%(5년), (인구감소지역) 취 75% 재 50%(5년)</li> </ul> </li> </ul> </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ul>
<p>&lt;⑨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직접사용 부동산 §71③&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25%</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b>감면종료</b></p>
<p>&lt;⑩ 도시첨단물류단지 부동산 §71의2①②&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대상) 물류시설용 부동산</li> <li>○ (감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행 자: 취득세 15%(+조례 10%)</li> <li>- 입주기업: 취득세 40%(+조례 10%)</li> </ul> </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b>현행 3년 연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대상) 물류시설용 부동산</li> <li>○ (감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행 자: 취득세 15%(+조례 10%)</li> <li>- 입주기업: 취득세 40%(+조례 10%)</li> </ul> </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ul>

개정 전	개정 후
<b>&lt;⑪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72&gt;</b> ○ (감 면 율) 취득세 25p 경감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100% ○ (일몰기한) <u>2025.12.31.</u>	<b>☞ 현행 3년 연장</b> ○ (감 면 율) 취득세 25p 경감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100% ○ (일몰기한) <u>2028.12.31.</u>

## < 개정내용 >

- (①,②)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감면은 교통 인프라 개선 등 공익성 고려하여 감면 연장하되,
  - 국가 귀속 예정인 철도차량 및 부동산에 대하여 반대급부 유무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50% 또는 100%) 적용하도록 재설계
  - ※ 목적세적 성격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 정비
- (③)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감면은 교통 편익 증진 등 공익성 고려하여 감면 연장하되 목적세적 성격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 정비
- (④,⑤) 국민의 교통 편익 증진 등 공익성 고려하여 감면 연장
  - ※ (도시철도공사) 최소납부세제 적용 유예 연장(2026.1.1. 적용 → 2029.1.1. 적용)
  - [부칙(법률 제15295호, 2017.12.26.) 제7조]
- (⑥)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수소전기화물자동차에 보급 촉진을 위해 취득세 감면을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
- (⑦)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연구 및 검사소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은 자동차 사고 예방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
- (⑧) 물류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역 물류비용 절감 등을 감안하여 감면 연장하되,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차등을 두어 감면율 재설계

- (⑨) 복합물류터미널 조성이 기 완료되어 장기간 감면 실적 미미한 점을 고려 하여 감면 종료
- (⑩) 물류사업 서비스 개선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
- (⑪)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은 읍·면 등 낙후된 지역에 대한 보편적 행정서비스 제공 지원하는 점 등 고려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

## 7 국토·지역개발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p>&lt;①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74, 법률 제19232호 부칙 제11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50%~100%</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b>현행 3년 연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50%~100%</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ul> <p>※ <u>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부동산소유자의 범위에 상속인 포함</u></p>
<p>&lt;②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75의2&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적용</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b>재산세 감면기간 설정 및 3년 연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 현행과 같음 재산세 : <u>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50% 범위에서, 그 다음 3년간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적용</u></li> <li>※ <u>조례 연계 개정 必</u></li> <li>○ (창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준용 규정 신설</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ul>
<p>&lt;③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75의4&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100%</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b>현행 3년 연장 및 명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100%</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u>‘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규정(법§58-3⑥) 인용</u></p>
<p>&lt;④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75의5&gt;</p> <p>1. 창업·사업장 신설용 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 100%(2년 이후 3년간 50%)</li> <li>○ (추징요건) 1년 이내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 2년 내에 매각·증여 또는 타용도 사용시</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b>현행 3년 연장 및 명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 100%(2년 이후 3년간 50%)</li> <li>○ (추징요건) 1년(신축의 경우 토지는 2년)이내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 2년 내에 매각·증여 또는 타용도 사용시</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ul> <p>※ <u>‘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규정(법§58-3⑥) 인용</u></p>

개정 전	개정 후																								
<div>2.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div> <div><div>○ (감면대상)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div><div>○ (취득원인) 유상거래</div><div>○ (감 면 율) 취득세 25%(조례 추가 25%)</div><div>○ (일몰기한) 2026.12.31.</div></div> <div>3.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div>	<div><div>☞ 감면대상 확대 및 2년 연장</div><div><div>○ (감면대상) 인구감소지역 및 <u>인구감소 관심지역</u> 소재 주택</div><div>○ (취득원인) 유상거래 및 <u>신축</u></div><div>○ (감 면 율) 취득세 25%(조례 추가 25%)</div><div>○ (감면한도) <u>150만원</u></div><div>○ (일몰기한) 2028.12.31.</div></div></div> <div><div>☞ 감면 신설</div><div><div>○ (감면대상) <u>사원에게 임대용으로 제공하는 85㎡이하 공동주택(다가구 포함) 및 기숙사</u></div><div>○ (감 면 율) <u>취득세 50%(조례 추가 25%)</u></div><div>○ (추징요건) 1년(신축의 경우 토지는 2년)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년 내에 매각·증여 또는 타용도 사용시</div><div>○ (일몰기한) 2028.12.31.</div></div></div>																								
<div>&lt;⑤ 빈집 정비를 위한 감면 신설§75의6&gt;</div>	<div><div>☞ 감면 신설</div><div><div>○ (감 면 율)</div><div><div>-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 : 재산세(도시 지역분 포함) 50%(5년)</div><div>- 해당 토지에 3년 내 신축하는 주택·건축물 : 취득세 25%(+조례 25%) ※ 감면 한도 75만원(조례 75만원 추가可)</div></div><div>○ (일몰기한) 2028.12.31.</div></div></div>																								
<div>&lt;⑥ 산업단지 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부동산§78&gt;</div> <div><div>○ (감 면 율)</div><div><div>- 시 행 자 : <u>취득세 35%, 재산세 35%*</u></div><div>* (재산세) 수도권 外 60%, 조성등이 아닌 직접사용은 감면기간 5년</div><div>- 입주기업 : <u>취득세 50%*, 재산세 35%(5년)**</u></div><div>* 취득세 + 조례 25%, ※ (대수선) 취득세 25% +조례 15% 可 ** (재산세) 수도권 外 60%</div></div><div>○ (일몰기한) 2025.12.31.</div></div>	<div><div>☞ 감면 재설계, 현행 3년 연장</div><div><div>○ (감 면 율) <u>지역별 차등 재설계</u></div><table><tr><th>감면대상</th><th>지역구분</th><th>취득세</th><th>재산세</th></tr><tr><td rowspan="3">시행자*</td><td>수도권</td><td>15%</td><td>15%</td></tr><tr><td>비수도권</td><td>35%</td><td>50%</td></tr><tr><td>인구감소지역</td><td>50%</td><td>60%</td></tr><tr><td rowspan="3">입주기업**</td><td>수도권</td><td>35%</td><td>35%</td></tr><tr><td>비수도권</td><td>50%</td><td>60%</td></tr><tr><td>인구감소지역</td><td>75%</td><td>75%</td></tr></table><div><div>* 시행자의 재산세 감면 기한 5년 설정</div><div>- (분양 임대 부동산) 조성공사 끝난 토지 + <u>산업용 건축물</u></div><div>** 취득세 + 조례 25%, ※ (대수선) 취득세 25% +조례 15% 可</div></div><div>○ (일몰기한) 2028.12.31.</div></div></div>	감면대상	지역구분	취득세	재산세	시행자*	수도권	15%	15%	비수도권	35%	50%	인구감소지역	50%	60%	입주기업**	수도권	35%	35%	비수도권	50%	60%	인구감소지역	75%	75%
감면대상	지역구분	취득세	재산세																						
시행자*	수도권	15%	15%																						
	비수도권	35%	50%																						
	인구감소지역	50%	60%																						
입주기업**	수도권	35%	35%																						
	비수도권	50%	60%																						
	인구감소지역	75%	75%																						

개정 전	개정 후
<p>&lt;⑦ 한국산업단지공단 부동산§78의2&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 <u>35%</u>, 재산세 <u>50%</u></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감면 재설계, <b>현행 3년 연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율) 취득세 <math>\frac{\text{수도권} 25\% \cdot \text{비수도권} 35\%}{\text{수도권} 25\% \cdot \text{비수도권} 50\%}</math> 재산세 <math>\frac{\text{수도권} 25\% \cdot \text{비수도권} 50\%}{\text{수도권} 25\% \cdot \text{비수도권} 50\%}</math></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ul>
<p>&lt;⑧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접 사용 부동산§78의3&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100%* * 사업초기 5년 100%, 그 다음 2년 50% 등</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감면 종료</p>
<p>&lt;⑨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81&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공공기관의 부동산 및 법인등기) : 취득세 50% · 재산세 5년간 50%, 등록면허세 면제</li> <li>○ (이전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 1가구 1주택) : 취득세 62.5~100%</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b>현행 3년 연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공공기관의 부동산 및 법인등기) : 취득세 50% · 재산세 5년간 50%, 등록면허세 면제</li> <li>○ (이전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 1가구 1주택) 취득세 62.5~100%</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ul>
<p>&lt;⑩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84&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집행)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 중, 용어 정의는 없으나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미집행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운영 중</li> <li>○ (감면대상) 도시·군계획시설·공공시설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그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에만 감면</li> <li>○ (일몰기한) <u>2027.12.31.</u></li> </ul>	<p>☞ 미집행의 정의 신설 등 규정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집행) <u>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포함)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감면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화</u> - 도시정비사업은 <u>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 제외</u></li> <li>○ (감면대상) <u>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포함</u></li> <li>○ (일몰기한) <u>2027.12.31.</u></li> </ul>



## < 개정내용 >

- (①)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원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현행 수준으로 3년 연장**
- (②) 지방투자를 촉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현행 수준으로 3년 연장하되, 장기간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례방지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산세 감면기간 설정 등
- (③)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은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각종 규제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하되,**
  - ‘창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인용함**으로써 조문 간 형평성 및 정합성 제고
- (④-1) 생활인구 유입 증가 및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하되,**
  - ‘창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인용함**으로써 조문간 형평성 및 정합성 제고
- (④-2) 침체된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외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세컨드홈 감면대상 **확대**, 취득원인 추가 및 감면대상 주택가액 상향하되, 감면금액 한도를 150만원으로 설정
- (④-3) 기업 사원의 정주여건 개선·기업 부담완화 등을 위하여 **사원에게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⑤) 빈집 철거를 유도하고 철거 후 토지의 신속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토지 및 신축하는 주택·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신설**
- (⑥)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위해 **연장하되**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으로 **감면을 차등 재설계**,

- 또한, 사업시행자의 분양·임대용 산업용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의 경우 유사 감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적용기한 5년 설정
- (⑦)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감면 재설계 및 감면 연장
- (⑧)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국세는 既 감면 종료(18년)하였고, 조세감면이 전체 외국인투자와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 고려 감면 종료
-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25년 말까지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감면 적용 가능

※ '18년 국세 감면 종료 시 '18년 말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한 경우 감면 적용하였으나, 이는 법 규정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지특법」은 '25년 말까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 종전 감면 적용 가능

< 관련 규정 참고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하 생략)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하 생략)

- (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진 및 국가 정책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현행 감면 3년 연장
- (⑩) '미집행' 종기 및 감면범위에서 실무 운영과 법원 판결 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정비

## 8 공공행정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p>&lt;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갱생보호사업 부동산§85①&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b>현행 3년 연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ul>
<p>&lt;②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85의2&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사) 취득세·재산세 50%</li> <li>○ (지방공단) 취득세·재산세 100%</li> <li>○ (지방출자·출연기관) 취득세·재산세 50%</li> <li>○ (추징요건) <u>일반적 추징규정</u></li> </ul> <p>○ (일몰기한) <u>2025.12.31.</u></p>	<p>☞ <b>현행 3년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사) 취득세·재산세 50%</li> <li>○ (지방공단) 취득세·재산세 100%</li> <li>○ (지방출자·출연기관) 취득세·재산세 50%</li> <li>○ (추징요건) <u>1년(신축의 경우 토지는 2년) 이내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 2년 내에 매각·중여 또는 타용도 사용시</u></li> </ul> <p>○ (일몰기한) <u>2028.12.31.</u></p>
<p>&lt;③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감면§88①&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100%</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b>현행 3년 연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100%</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ul>
<p>&lt;④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감면§88②&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100%</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b>감면 종료</b></p>
<p>&lt;⑤ 정당의 직접 사용 부동산§89&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100%</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b>현행 3년 연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100%</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ul>
<p>&lt;⑥ 마을회에 대한 감면§90&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li> <li>○ (선 박) 취득세 100%</li> </ul>	<p>☞ <b>감면대상 확대 및 3년 연장, 재설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li> <li>○ (선 박) 취득세 100% <u>재산세 100%,</u> <u>지역자원시설세 100%</u></li> </ul>

개정 전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소)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100%</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li>○ (추징요건) 5년 이내 수익사업시 1년 이내 해당용도 미사용 직접사용 개시 후 2년 미만 매각·증여 또는 타 용도 사용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소) <u>주민세 감면 종료</u></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li>○ (추징요건) 5년 이내 수익사업시 <u>1년(신축의 경우 토지는 2년)이내</u> <u>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u> 직접사용 개시 후 2년 미만 매각·증여 또는 타 용도 사용시</li> </ul>
<p>&lt;⑦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91&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례내용) 취득세 2%(저율) 세율 적용</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감면 종료</p>

### < 개정내용 >

- (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출소자의 사회 복귀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
- (②)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교육·문화 진흥 등 주민복리 증진 지원 및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하되,
  - 일반적 추징규정 외 완화된 추징규정을 신설하여 사후관리 합리화
- (③) 지역공동체 나눔·돌봄 활동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
- (④) 한국자유총연맹은 **감면 종료**
- (⑤) 정당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
- (⑥)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지원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감면 3년 연장**하되,
  - 소외 도서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하여 선박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및 감면효과성을 고려하여 주민세 감면 종료

- 신축의 경우 비교적 공사소요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완화대상이 토지임을 명확화하는 등 사후관리 합리화
- (⑦)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장기간 감면('87년 도입), 최근 10년간 취득세 감면 실적이 없는 등을 고려하여 감면 종료

## 9 지방소득세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b>&lt;①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167&gt;</b> ○ (특례내용) 당기순이익 과세 저율세율 적용 ※ 국세(법인세) 체계와 동일 ○ (일몰기한) 2025.12.31.	<b>☞ 현행 3년 연장</b> ○ (특례내용) 당기순이익 과세 저율세율 적용 ※ 국세(법인세) 체계와 동일 ○ (일몰기한) 2028.12.31.
<b>&lt;②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조문 정비 §167의3&gt;</b> ○ 납부서 발송 인용조문 (「지방세법」 제95조제4항)	<b>☞ 인용조문 변경 반영</b> ○ 납부서 발송 인용조문 (「지방세법」 제95조제5항)
<b>&lt;③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167의5&gt;</b>	<b>☞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촉진을 위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b> ○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1인당 45만원(중소 70만원) 세액공제 규정 신설
<b>&lt;④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167의6&gt;</b>	<b>☞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신설</b>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개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되도록 규정 신설

### < 개정내용 >

- (①)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 현행 3년 연장
- (②) 납부서 발송 근거조항이 개정된 사항 반영(지방세법 §95④ → §95⑤)하여 정비
- (③) 인구감소지역 일자리를 확대하고 해당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1인당 45만원(중소 70만원)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규정 신설
- (④) 국세(소득세)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개인지방소득세도 과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규정 신설

## 10 기타

개정 전	개정 후
<p>&lt;①지방세 특례 정의규정 명확화 등 §2①5의2·6, §4① §75의3, §80의2&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 설)</li> <li>○ 서울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li> <li>○ 자치단체는 조례로 지방세의 <u>서울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지방세 감면)</u>를 할 수 있음</li> </ul>	<p>☞ 인구감소지역 정의 신설 및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감소지역’ 공통 정의 신설</li> <li>○ 서울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u>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 등</u></li> <li>○ 자치단체는 조례로 지방세의 <u>서울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지방세 감면)</u>을 할 수 있음</li> </ul>
<p>&lt;②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 신설 법 §2, §185, 영§128&gt;</p>	<p>☞ 특례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사용) 특례 적용 대상 위탁자 포함</li> <li>○ (적용 특례) 담보신탁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면 적용</li> </ul>
<p>&lt;③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 예외 규정 정비 §4⑦,영2⑧&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규모 총량 적용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감면 규모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li> </ul> </li> <li>○ (감면규모 총량 별도 추가 가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대응 및 복구, 국가적 현안, 정산업 육성을 위한, 특구나 단지 지원 등*</li> </ul> </li> </ul> <p>*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는 지방세 감면 가능(영§2⑧),</p>	<p>☞ 조례 총량 예외 규정 정비 및 별도 총량 대상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규모 총량 적용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총량 적용 예외 단서 규정 삭제</u></li> </ul> </li> <li>○ (감면규모 총량 별도 추가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현행 +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u></li> </ul> </li> </ul>
<p>&lt;④중과세율 적용 배제특례*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180의2②&gt;</p> <p>* 리츠, 부동산펀드, PFV의 경우 취득세 대도시 중과배제</p>	<p>☞ 추정규정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과를 적용하여 감면분 추정</li> </ul>
<p>&lt;⑤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 특례 신설 §186&gt;</p>	<p>☞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한 특례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제외되더라도 특정 요건 충족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li> </ul>

## < 개정내용 >

- (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 '지방세 특례' 및 조례 감면 대상 '지방세 감면' 정의 명확화
- (②) 신탁의 형태\*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감면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 등 해소하기 위해 감면 신설
  - \* (토지신탁) 토지 개발을 위한 신탁이므로 수탁자는 사업시행자 지위 가짐 → 감면 ○  
(담보신탁) 자금조달을 위한 신탁이므로 수탁자는 사업시행자 지위 가지지 않음 → 감면 X
  - 담보신탁의 경우에도 위탁자가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적용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감면을 지방세 감면 규모 총량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감면이 가능하도록 정비
  - \* (령§2⑧개정)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신설하여 예외 규정으로 운영
- (④) 리츠, 부동산펀드, PFV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
  -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감면분 추징 신설
- (⑤) 종전에는 인구감소지역등\*에 해당하였으나 지역 재지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제외된 지역의 감면을 적용할 때
  - 특정 요건 충족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특례 신설

\*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구분	주요 내용	조문 (일몰기한)
① 신탁관련 지방세 감면 특례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담보신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그 신탁 수익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신탁</li> </ul> </li> <li>▪ (대상) 담보신탁의 위탁자*를 취득자로 보고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지배·통제하여 부동산을 개발·조성 및 건축하는 경우</li> </ul> </li> <li>▪ (내용) 직접사용 적용대상에 위탁자를 포함하고, 위탁자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세 감면 적용</li> </ul>	제2조, 제185조 영 제128조
② 공공매입임대 주택 감면 확대(HU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 지원</li> <li>▪ (대상)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규모 이하의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오피스텔(주거용)·기숙사와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li> </ul> </li> <li>▪ (대상자) LH, 지방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li> <li>▪ (감면내용) 취득세25%·재산세 50%</li> </ul>	제31조제6항 (2027.12.31.)
③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개인 구입자 감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미분분양 물량 해소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li> <li>▪ (대상)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 수도권 외의 지역 소재, 전용면적 85㎡·취득가액 6억원 이하,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법인·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제외)하는 아파트로서 실제 입주한 기간(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입주한 기간 제외)이 1년 미만인 아파트</li> </ul> </li> <li>▪ (감면내용) 취득세 최대 50% 감면(법25%+ 조례25%)</li> </ul>	제33조의3 제4항·제5항 (2026.12.31.)

구분	주요 내용	조문 (일몰기한)
④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지방세 감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지방 건설경기 유동성 지원</li> <li>▪ (대상자) 주택도시보증공사</li> <li>▪ (대상) 2028.12.31.까지 매입하는 지방 준공 전 미분양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의 주택 중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수도권 외의 지역 소재</li> </ul> </li> <li>▪ (감면내용) 취득세 100%, 재산세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납부세제 배제</li> </ul> </li> <li>▪ (대상자) 사업주체</li> <li>▪ (대상) 환매기간(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1년)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재매입하는 공동주택</li> <li>▪ (감면내용) 취득세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납부세제 배제</li> </ul> </li> </ul>	제34조 제8항·제9항 (2030.12.31.)
⑤ 생애최초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구입 시 감면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 촉진 및 지역경기 활성화</li> <li>▪ (대상) 생애최초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12억원 이하, 유상거래로 취득)</li> <li>▪ (감면내용) 취득세 감면한도 확대(200만원→300만원)</li> </ul>	제36조의3 제1항 (2028.12.31.)
⑥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li> <li>▪ (대상) 신성장·원천기술 + <b>국가전략기술*</b>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2]</li> <li>▪ (감면내용) 15% 추가 감면을 적용</li> </ul>	제46조 (2028.12.31.)
⑦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예방</li> <li>▪ (대상) 건축대수선을 통해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포함)를 설치한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非의무대상 숙박시설 限</li> </ul> </li> <li>▪ (감면내용) 취득세 100%, 재산세 100%,(2년, 이후3년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납부세제 적용</li> </ul> </li> </ul>	제47조의4 (2028.12.31.)

구분	주요 내용	조문 (일몰기한)
⑧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지원</li> <li>▪ (대상) 인구감소지역 및 <u>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 지역</u> 소재 주택</li> <li>▪ (감면내용) 취득세 25%(+조례 25%) 감면*</li> </ul> <p>* 감면한도 : 법 75만원 + 조례 75만원</p>	제75조의5 제4항 (2028.12.31.)
⑨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 감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기업 사원의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부담 완화</li> <li>▪ (대상) 사원에게 임대용으로 제공하는 85㎡이하 공동주택 (다가구 포함) 및 기숙사</li> <li>▪ (감면내용) 취득세 50%(+조례 25%)</li> </ul>	제75조의5 제7항 (2028.12.31.)
⑩ 빈집 정비 위한 감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빈집 관련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여 빈집 정비 촉진</li> <li>▪ (대상) 빈집 철거 토지 및 해당 토지에 3년 내 신축하는 주택·건축물</li> <li>▪ (감면내용)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감면(5년), 취득세 25%(+조례 25%) 감면*</li> </ul> <p>* 감면한도 : 법 75만원 + 조례 75만원</p>	제75조의6 (2028.12.31.)
⑪ 마을회 소유 선박에 대한 감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소외 도서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li> <li>▪ (대상) 마을회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선박</li> <li>▪ (감면내용) 취득세 100% + <u>재산세100%, 지역자원 시설세 100%</u> ,</li> </ul>	제90조 (2028.12.31.)
⑫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 등</li> <li>▪ (대상) 인구감소지역에 본·지점 등이 소재하는 법인</li> <li>▪ (요건)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li> </ul> <p>* 고용시점에 해당 기업 소재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내용)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 70만원) 법인 지방소득세 세액공제</li> </ul>	제167조의5 (2028.12.31.)
⑬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주식시장 활성화 등</li> <li>▪ (대상)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조특법에 따른 분리과세를 적용한 경우</li> <li>▪ (감면내용) 소득세율의 100분의 10 적용</li> </ul>	제167조의6 (2028.12.31.)



## **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 1

## 지방세 특례 정의 규정 명확화 등(법 §2①5의2·6, §4① §75의3, §80의2)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인구감소지역 정의 신설(§2①5의2)
<input type="checkbox"/> 지방세 특례 정의 ○ 서울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u>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u> )	<input type="checkbox"/> 정의 규정 명확화(§2①6) ○ 서울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u>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 등</u>
<input type="checkbox"/> 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 자치단체는 조례로 지방세의 <u>서울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지방세 감면)</u> 를 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범위 명확화(§4①) ○ 자치단체는 조례로 지방세의 <u>서울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전환(지방세 감면)</u> 을 할 수 있음

☐ 개정내용

- 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 ② 괄호로 표현된 규정을 단순 열거규정으로 전환하여 해석 명확화
- ③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이 포괄하는 범위 명확화

☐ 적용요령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부칙 §1)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lt;신설&gt;</u>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u>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u> 등을 말한다. 7. (생략) 8. ~ 14. (생략) ② (생략)	제2조(정의) ①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6. ----- ----- <u>과세표준 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u> ----- ----. 7. (현행과 같음) 8. ~ 14.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u>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u> 를 할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 ----- ----- ----- ----- <u>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하 이 조 및</u>



개정 전	개정 후
수 있다.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② ~ ⑧ (생략)	한다)을-----.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
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에 대한 감면) ① -----
지역(이하 이 조에서 “위기지역”이	-----
라 한다)에서 제58조의3제4항 각	-----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
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	-----
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전환계	-----
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전	-----
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	-----
우에는 그 율)을 경감하고, 2027년	-----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	-----
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	-----
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

개정 전	개정 후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한다.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 <u>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u> 」 에 따라 지정된 <u>인구감소지역</u> ② · ③ (생략)	4. <u>인구감소지역</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 음)
② 수도권(제75조의5에 따른 <u>인구 감소지역</u> 또는 「 <u>접경지역 지원 특별법</u> 」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공장시설 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이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 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및 공 장의 범위, 업종,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은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한다.	② ----- <u>인구감소지역</u> ----- ----- ----- ----- ----- ----- ----- ----- ----- ----- -----.

개정 전	개정 후
1. · 2. (생 략) ③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 예외 규정 정비(법 §4⑦, 영 §2⑧,⑨)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p>□ 지방세 감면규모 총량 예외</p> <p>○ 행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 <u>지방세 감면규모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u></p>	<p>□ 감면규모 총량 예외 규정 정비(§4⑦)</p> <p>○ <u>총량 적용 예외 단서 규정 삭제</u>*</p> <p>* 총량 비율 내 조례 운영</p>
<p>□ 감면규모 총량 별도 추가 대상</p> <p>○ <u>재난대응 및 복구, 국가적 현안, 특정산업 육성을 위한, 특구나 단지 지원 등</u>*</p> <p>*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경우 조례로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는 지방세 감면 가능(영§2⑧)</p>	<p>□ 감면 총량 별도 추가 대상 확대(영§2⑧,⑨)</p> <p>○ 현행 + <u>‘인구감소지역의 경제활력 제고’ 추가</u></p> <p>※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영§2⑧·⑨)</p>

### □ 개정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 감면 규모 총량에서 제외하는 규정 삭제(§4⑦)
  - ※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경우, 조례로 지방세 감면 규모(일정비율 5% 이내)를 초과하는 지방세 감면 가능하며, 현재 시행령으로 운영 중(영§2⑧)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총량비율 별도 대상 추가(영§2⑧·⑨)
  - \* 현행 대상에 ‘인구감소지역의 경제활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여 행안부장관 협의 범위를 확대
  - ※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사항(영§2⑧·⑨)
    - 1) 영§2⑧5호 : ~ 제4호 ~ → 영§2⑧6호 : ~제5호 ~
    - 2) 영§2⑨ : “법 제4조제7항 본문” → “법 제4조제7항”

## □ 적용요령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부칙 §1)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생략) ② ~ ⑥ (생략)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u>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u> ⑧ (생략)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 ----- <u>&lt;단서 삭제&gt;</u>  ⑧ (현행과 같음)

## ■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illegible]

개정 전	개정 후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안전 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
⑨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 방세 감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 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 는 <u>법 제4조제7항</u> 본문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 액을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	⑨ ----- ----- ----- ----- ----- <u>법 제4조제7항</u> ----- ----- ----- -----.

■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임업후계자 등에 대한 감면 요건 추가(법 §8③)

#### 1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임업후계자 등 취득세 감면 <input type="radio"/>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 : 100% - 보전산지 임야 : 50%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u>2025.12.31.</u>	<input type="checkbox"/> 감면요건 추가 및 연장 <input type="radio"/> (감면대상) - (현행과 같음) - <u>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u> 취득하는 보전산지 임야 : 50%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u>2028.12.31.</u>

#### ☐ 개정내용

- 임업에 대한 지속 지원을 통한 농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보전산지에도 “임업 직접 사용” 요건 추가
    - ※ 종전에는 보전산지는 직접 임업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 적용

####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 ----- ----- ----- ----- <u>2028년 12월 31일</u> -----.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 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 ----- ----- ----- ----- ----- ----- -----.
②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분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 ----- ----- ----- ----- ----- ----- ----- ----- <u>2028년 12월 31일</u> -----.

개정 전	개정 후
<p>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하고,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u>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u>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u>2025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p> <p>④ (생략)</p>	<p>③ ----- ----- ----- ----- -----202 8년 12월 31일----- ----- <u>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에</u>----- ----- ----- ----- ----- ----- ----- ----- -----2028년 12월 3 1일-----.</p> <p>④ (현행과 같음)</p>

#### ■ 법률 부칙

제2조(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3항, … 중략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4

## 어업·양식업권 감면 세목 축소(법 §9③)

## 1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어업권·양식업권의 출원, 면허 등록 ○ (감면율)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u>2025.12.31.</u>	<input type="checkbox"/> 등록면허세 감면 종료 ○ (감면율)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u>종료</u> ○ (일몰기한) <u>2028.12.31.</u>

☐ 개정내용

- 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취득세 감면은 3년간 연장하여 지속 지원하되, 행정행위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등록면허세는 종료

☐ 적용요령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부칙 §1)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② ----- ----- ----- ----- <u>2028년 12월 31</u> <u>일</u> -----.
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해서는 <u>취득세를, 어업권·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u> 면제한다.	③ ----- ----- <u>취득세</u> <u>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u>

#### ■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5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별 감면을 축소 및 정비(법 §13②)

1 개정개요

현행	개정안																																																						
<div>□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감면</div> <div>○ (감면내용) 사업별 차등 감면</div> <table><tr><th>법(호)</th><th>대상 사업</th><th>감면율</th></tr><tr><td>1</td><td>농지매매사업 등</td><td>취 50%</td></tr><tr><td>1-2</td><td>생산기반정비사업</td><td>취 50%, 재 75%</td></tr><tr><td>1-3</td><td>조성토지 처분특례</td><td>취 50%</td></tr><tr><td>2</td><td>경영회생지원사업</td><td>취 50%, 재 50%</td></tr><tr><td>3</td><td>과원 규모화 사업</td><td>취 50%</td></tr><tr><td>4</td><td>생활환경정비 사업</td><td>취 25%</td></tr><tr><td>4-2</td><td>농지 재개발 사업</td><td>취 25%</td></tr><tr><td>5</td><td>농지시장안정사업</td><td>취 50%</td></tr></table> <div>○ (일몰기한) 2025.12.31.</div>	법(호)	대상 사업	감면율	1	농지매매사업 등	취 50%	1-2	생산기반정비사업	취 50%, 재 75%	1-3	조성토지 처분특례	취 50%	2	경영회생지원사업	취 50%, 재 50%	3	과원 규모화 사업	취 50%	4	생활환경정비 사업	취 25%	4-2	농지 재개발 사업	취 25%	5	농지시장안정사업	취 50%	<div>□ 사업별 감면을 축소 및 정비</div> <div>○ (감면내용) 사업별 차등 감면</div> <table><tr><th>법(호)</th><th>대상 사업</th><th>감면율</th></tr><tr><td>1</td><td>농지매매사업 등</td><td><b>취 30%</b></td></tr><tr><td>1-2</td><td>생산기반정비사업</td><td>취 50%, 재 75%</td></tr><tr><td>1-3</td><td>조성토지 처분특례</td><td><b>감면 종료</b></td></tr><tr><td>2</td><td>경영회생지원사업</td><td>취 50%, 재 50%</td></tr><tr><td>3</td><td>과원 규모화 사업</td><td>취 50%</td></tr><tr><td>4</td><td>생활환경정비 사업</td><td><b>감면 종료</b></td></tr><tr><td>4-2</td><td>농지 재개발 사업</td><td><b>감면 종료</b></td></tr><tr><td>5</td><td>농지시장안정사업</td><td><b>취 30%</b></td></tr></table> <div>○ (일몰기한) 2028.12.31.</div>	법(호)	대상 사업	감면율	1	농지매매사업 등	<b>취 30%</b>	1-2	생산기반정비사업	취 50%, 재 75%	1-3	조성토지 처분특례	<b>감면 종료</b>	2	경영회생지원사업	취 50%, 재 50%	3	과원 규모화 사업	취 50%	4	생활환경정비 사업	<b>감면 종료</b>	4-2	농지 재개발 사업	<b>감면 종료</b>	5	농지시장안정사업	<b>취 30%</b>
법(호)	대상 사업	감면율																																																					
1	농지매매사업 등	취 50%																																																					
1-2	생산기반정비사업	취 50%, 재 75%																																																					
1-3	조성토지 처분특례	취 50%																																																					
2	경영회생지원사업	취 50%, 재 50%																																																					
3	과원 규모화 사업	취 50%																																																					
4	생활환경정비 사업	취 25%																																																					
4-2	농지 재개발 사업	취 25%																																																					
5	농지시장안정사업	취 50%																																																					
법(호)	대상 사업	감면율																																																					
1	농지매매사업 등	<b>취 30%</b>																																																					
1-2	생산기반정비사업	취 50%, 재 75%																																																					
1-3	조성토지 처분특례	<b>감면 종료</b>																																																					
2	경영회생지원사업	취 50%, 재 50%																																																					
3	과원 규모화 사업	취 50%																																																					
4	생활환경정비 사업	<b>감면 종료</b>																																																					
4-2	농지 재개발 사업	<b>감면 종료</b>																																																					
5	농지시장안정사업	<b>취 30%</b>																																																					

□ 개정내용

- 농어업 지원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감면을 연장하고,
  - 감면율을 다른 공공기관 수준에 맞게 축소하고, 감면 필요성 및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정비
- (감면율 축소) : 제1호, 제5호

1호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취 50% → 30%
1-2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토지 시설물	현행유지(취50% 재75%)
2호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등	현행유지(취 50%)
3호	FTA 피해 농어업인 경영규모 확대 지원 목적 취득 농지	
5호	농지시장 안정을 위해 매입(간척 포함)한 농지 등	취 50% → 30%

- 담세력,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로 임대·매매용으로 사용되는 농지(제1호, 제5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축소
- 다만, 농업용수 공급 등 공익성이 높은 농업생산기반시설(제1-2호) 및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지원 사업(제2호, 제3호)은 현행 유지
- (감면 종료) 제1-3호, 제4호, 제4-2호
  - 사용용도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관광용지 등으로 사용되거나(제1-3호), 영리성이 강하여 지원 필요성 낮은 개발사업은 종료(제4호, 제4-2호)

##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3①)
-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부칙 §3②)

## ②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생략)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감면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② ----- ----- ----- <u>2028년 12월 31일</u> ----- ----그 취득일-----

개정 전	개정 후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업인, 농업법인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외의 자에게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제4호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한다.	----- ----- ----- ----- ----- -----추징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 「농지법」 제11조·제15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1. ----- ----- ----- ----- ----- -----100분의 30----- -----.
1의2. (생략)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삭 제>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4.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	<삭 제>

개정 전	개정 후
<p><u>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u></p> <p><u>4의2.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u></p> <p>5.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u>100분의 50</u>을 경감한다.</p> <p>③ <u>제2항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u>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p>	<p><u>&lt;삭 제&gt;</u></p> <p>5. ----- ----- ----- -----10 0분의 30-----.</p> <p>③ <u>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u> ----- -----</p>



개정 전	개정 후
<p>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p> <p>④ (생략)</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④ (현행과 같음)</p>

#### ■ 법률 부칙

제3조(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제1호의3·제4호·제4호의2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 <input type="radio"/> (감면율)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100%* * 100% 내 조례로 정하는 율 x 지자체 투자비율 ※ <u>최소납부세제 적용 유예*</u> ~25.12.31. * 부칙(법률 제15295호, 2017.12.26.) 제7조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u>2025.12.31.</u>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및 최소납부세제 적용(유예 종료) <input type="radio"/> (현행과 같음) ※ <u>최소납부세제 적용 유예 종료</u>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u>2028.12.31.</u>

☐ 개정내용

- 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감면을 연장하고, 그 간 세부담 여력을 고려하여 유예하였던 최소납부세제는 적용

☐ 적용요령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부칙 §1)
- 2026년 1월 1일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부칙(법률 제15295호, 2017.12.26.) §7조]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②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감면한다.	② ----- ----- ----- ----- ----- ----- ----- ---2028년 12월 31일-----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 ----- ----- ----- ----- ----- -----

개정 전	개정 후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2항, 제63조제5항: 2026년 1월 1일	3. 제15조제2항-----
<신설>	4. 제63조제5항: 2029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8년 1월 1일	5. -----제4호----- -----

■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업용 부동산 등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법인·한국한센복지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재산세·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li> </ul> </li> <li>○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료) 취득세25% 재산세25%</li> <li>- (무료) 취득세 면제, 재산세50%</li> </ul> </li> <li>○ 사회복지법인등 설립등기 및 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면허세(등록분, 면허분) 면제</li> </ul> </li> <li>○ 사회복지법인등 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면제</li> </ul> </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내 수익사업 사용시</li> <li>○ 3년 이내 해당 용도로 미사용</li> <li>○ 직접 사용 개시 후 2년 미만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li> <li>○ (신설)</li> </ul>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및 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과 같음)</li> <li>○ (현행과 같음)</li> <li>○ (현행과 같음)</li> <li>○ (현행과 같음)</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li>○ (현행과 같음)</li> <li>○ (현행과 같음)</li> <li>○ (현행과 같음)</li> <li>○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사회복지법인 해산 또는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경우</li> <li>○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사회복지시설 폐지신고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li> </ul>

## 개정내용

-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을 연장하되,
-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제4호 사회복지법인 해산 또는 설립허가 취소 및 제5호 사회복지시설 폐지신고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를 추정사유로 추가하여 사후관리 강화

 적용요령

- 2026. 1. 1. 부터 시행(부칙 §1)
- 제22조제2항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4)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감면한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u>2028년 12월 31일</u>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illegible]

개정 전	개정 후
<p>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각각 감면한다.</p> <p>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p> <p>1. 2. (생략)</p> <p>④ (생략)</p> <p>⑤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u>2025년 12월</u></p>	<p>-----</p> <p>-----</p> <p>-----</p> <p>-----</p> <p>-----<u>2028년 12월 31일</u>-----</p> <p>-----.</p> <p>-----</p> <p>-----</p> <p>-----</p> <p>-----</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개정 전	개정 후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2028년 12월 31일----- ---. ----- -----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⑦ ----- ----- ----- ----- ----- ----- -----2028년 12월 31일----- -----.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 ■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감면 지방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4호·제5호 및 제8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6.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 및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 6의2.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
7.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8. 제18조제1항의 임원정수를 위반한 때
9.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때
10.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② 법인이 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질문·회계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9. 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참고2

##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분류 현황(‘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복지부)

소관 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주거복지시설</li> <li>노인의료복지시설</li> <li>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가노인복지시설</li> <li>노인여가복지시설</li> <li>노인보호전문기관</li> <li>노인일자리지원기관</li> </ul>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양육시설</li> <li>아동일시보호시설</li> <li>아동보호치료시설</li> <li>자립지원시설</li> <li>공동생활가정</li> <li>학대피해아동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상담소</li> <li>아동전용시설</li> <li>지역아동센터</li> <li>아동보호전문기관</li> <li>가정위탁지원센터</li> <li>자립지원전담기관</li> </ul>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유형별 거주시설</li> <li>중증장애인 거주시설</li> <li>장애영유아 거주시설</li> <li>장애인단기 거주시설</li> <li>장애인공동생활가정</li> <li>피해장애인쉼터</li> <li>피해장애아동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li> <li>장애인직업재활시설</li> <li>장애인의료재활시설</li> <li>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li> <li>지역보조기기센터</li> </ul>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요양시설</li> <li>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li> </ul>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숙인자활시설</li> <li>노숙인재활시설</li> <li>노숙인요양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숙인종합지원센터</li> <li>노숙인일시보호시설</li> <li>노숙인급식시설</li> <li>노숙인진료시설</li> <li>쫓방상담소</li> </ul>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질병 관리청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여성 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지원시설</li> <li>청소년지원시설</li> <li>외국인지원시설</li> <li>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활지원센터</li> <li>성매매피해상담소</li> </ul>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폭력상담소</li> <li>긴급전화센터</li> </ul>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지원시설</li> <li>양육지원시설</li> <li>생활지원시설</li> <li>일시지원시설</li> </ul>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쉼터</li> <li>청소년자립지원관</li> <li>청소년치료재활센터</li> <li>청소년회복지원시설</li> </ul>		「청소년복지 지원법」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시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부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 참고3

### 납세의무자별 감면세목

납세 의무자	취	재	재(도)	지자세	등면(면)	등면(등) * 설립등기 합병등기	주인 (사_기본)	주인 (사_면적)	주인(종)
사회복지 법인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한국한센 복지협회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	면제	면제	면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	유료 25 무료면제 ※ 조례 50추가	유료 25 무료 50 ※ 조례 50추가	-	-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	-	-	-	-	-	면제	면제	면제
사회복지 시설 경영자 ※ 개인 포함	-	-	-	-	-	-	면제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 감면 <input type="radio"/> 취득세 25%, 재산세 25%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2025.12.31.	<input type="checkbox"/> 일몰연장 등 <input type="radio"/> (감면율) 현행과 같음 ※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감면 대상 명확화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내용

- 대국민 법률구조사업 및 소비자권익 증진 업무 등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인과 한국소비자원의 감면을 3년 연장하되,
- 한국소비자원의 감면 대상의 업무를 포괄적·추상적인 고유업무에서 「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1항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로 구체화

\*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제35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1.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2.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3.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4.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5.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6.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를결의 이행관리

## □ 적용요령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부칙 §1)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①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각각 경감한다.	① ----- ----- ----- ----- ----- ----- ----- <u>2028년 12월 31일</u> ----- -----.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u>한국소비자원</u> 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u>현재 그 고유업무에</u>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각각 경감한다.	② ----- <u>한국</u> <u>국소비자원</u> 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 ----- <u>현재 그 업무에</u> ----- ----- ----- <u>2028년 12월 31일</u> ----- -----.

#### ■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공공매입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input type="radio"/> (감면대상자) LH, 지방주택공사 <input type="radio"/> (감면대상) 매입하여 임대로 제공하는 주택등(부속토지 포함)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주거용), 기숙사 <input type="radio"/> (감면율) 취득세 25%, 재산세 50% 감면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2027.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대상자 확대 (§31⑥) <input type="radio"/>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가 <input type="radio"/> 현행과 같음  <input type="radio"/> 현행과 같음  <input type="radio"/> 현행과 같음

☐ 개정내용

- 현재 LH·지방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중(취득세 25%, 재산세 50%), HUG에서 '24년부터 동일한 임대주택 사업\* 추진
  - \* (든든전세주택) 전세금반환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한 주택을 HUG가 경매로 낙찰 받거나, 협의매수하여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감면대상에 HUG를 포함하여 LH 등과 과세형평성 제고 및 주로 취약계층이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적용요령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부칙 §1)
-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⑤ (생략)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 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주 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 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 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 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2. (생략) ⑦ · ⑧ (생략)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 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주택도시보 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 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⑦ · ⑧ (현행과 같음)

## ■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3항,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8조제4항, 제63조제2항·제3항, 제75조의2제1항·제3항, 제75조의4제2항, 제78조의2 본문,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5조 및 제18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0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법 §33의3)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p><input type="checkbox"/>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p> <p>○ (감면대상자) 사업주체</p> <p>○ (감면대상)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 전용면적 85㎡·취득가액 3억원 이하</p> <p>- (취득기간) 2024.1.10. ~ <u>2025.12.31.</u> 신축 취득</p> <p>- (임대조건) <u>2025.12.31.</u>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상 임대</p> <p>○ (감면율) 취득세 최대 50% 감면(법25%+조례25%)</p>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감면 1년 연장(법 §33의3①~③)</p> <p>○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p>- (취득기간) 2024.1.10. ~ <u>2026.12.31.</u> 신축 취득</p> <p>- (임대조건) <u>2026.12.31.</u>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상 임대</p> <p>○ (현행과 같음)</p> <p><input type="checkbox"/>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구입자 취득세 감면 신설(법 §33의3④⑤)</p> <p>○ (감면대상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자(법인·단체 제외)</p> <p>○ (감면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p> <p>-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외의 지역 소재</li> <li>- 전용면적 85㎡·취득가액 6억원 이하</li> <li>-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법인·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제외)하는 아파트로서 실제 입주한 기간(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입주한 기간 제외)이 1년 미만인 아파트</li> <li>○ (감면율) 취득세 최대 50% 감면(법25%+조례25%)</li> <li>○ (일몰기한) 2026. 12. 31.</li> </ul>
--	--

## □ 개정내용

- ① (사업주체)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2년이상 임대로 제공시 원시취득세 최대 50%(법25%+조례25%) 감면 1년 연장
- ② (개인 구입자)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최대 50%(법25%+조례25%) 감면 신설

## □ 적용요령

- ① (사업주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부칙 §1)
- ② (개인 구입자) 공포한 날부터 시행(부칙 §1)
  - 시행일(공포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 3. (생략) 4.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할 것 ② · ③ (생략) <u>&lt;신설&gt;</u>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 -----2 026년 12월 31일----- ----- --.  1. ~ 3. (현행과 같음) 4. 2026년 12월 31일-----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개정 전	개정 후
<p>&lt;신 설&gt;</p>	<p>2.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 (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 (법인·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아파트로서 실제 입주한 기간(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입주한 기간은 제외한다)이 1년 미만인 아파트일 것</p> <p>3.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p> <p>4.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p>

#### ■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3조의3제4항·제5항, 제34조제8항·제9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 공포한 날

제2조(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 ② 제33조의3제4항·제5항 및 제34조제8항·제9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주택도시보증공사 취득·보유 미분양주택 지방세 감면 신설</p> <p>○ (감면대상자) 주택도시보증공사</p> <p>○ (감면대상) 지방 준공 전 미분양 공동주택</p> <p>- (취득조건)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8년말까지 취득</p> <p>○ (감면율) 취득세·재산세 면제 ※ 최소납부 배제</p> <p>○ (추징요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 * 취득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중인 경우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p> <p>○ (일몰기한) 2030년말</p>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재매입 시 취득세 감면 신설</p> <p>○ (감면대상자) 사업주체</p> <p>○ (감면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입한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가 환매기간*내에 재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p> <p>* 공동주택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1년</p> <p>○ (감면율) 취득세 면제 ※ 최소납부 배제</p> <p>○ (일몰기한) 2030년말</p>



## □ 개정내용

- ① (HUG) '28년말까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면제(∼'30년말)
- ② (사업주체) HUG가 매입한 주택을 환매 기간내 사업주체가 재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30년말)

## □ 적용요령

- 공포한 날부터 시행(부칙 §1)
- 시행일(공포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 ②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①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로서 분양계약이 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	제34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① <u>주택도시보증공사</u> ----- ----- ----- ----- ----- -----.

개정 전	개정 후
<p>다.</p> <p>② ~ ⑦ (생략)</p> <p><u>&lt;신설&gt;</u></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⑧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 기금법」 제2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 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매 입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대하여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일(취득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고 임대 중인 경우에는 그 임대차기 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 세를 추징한다.</p> <p>1.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 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 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 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 택단지의 주택 중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일 것</p> <p>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p> <p>⑨ 사업주체가 제8항에 따라 주택도</p>
<p><u>&lt;신설&gt;</u></p>	

개정 전	개정 후
	<u>시보증공사가 매입한 미분양주택을 환매기간(공동주택 소유권보존등기일 로부터 1년) 내에 재매입하는 경우에 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u>

#### ■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3조의3제4항·제5항, 제34조제8항·제9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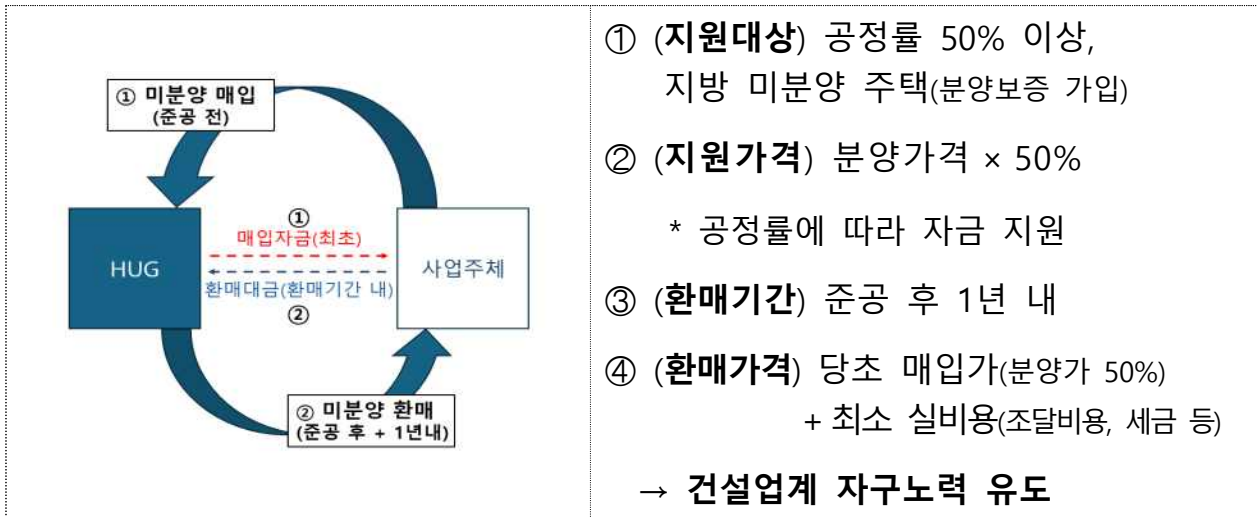
- ② 제33조의3제4항·제5항 및 제34조제8항·제9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참고

##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개요

- **(개요)** ①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②HUG가 유동성 지원, ③환매옵션 부여(준공 1년 내), ④할인 매각\*과 동시에 옵션행사

\* 향후 "할인분양하는 등 분양률 제고를 위해 적극 협조" 약속



- **(지원규모)** 3년간('25~'28) 1만호 지원 목표(추경 예산 2,500억원 포함)

### 연도별 지원규모(잠정)

구분	'25년 下		'26년	'27년	'28년	합계
	8월	11월				
세대	1,500호	1,500호	3,000호	2,000호	2,000호	10,000호

\* 수요에 따라 조정 예정

- **(지원기준)**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신용도, 재무건전성, 안전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 대상 선정 예정(예비심사 → 본심사 순서)

- **(지원효과)** 정부 출·융자, 취득세·재산세 등 비과세 예정(8.14일 발표) → HUG 부담 경감으로 환매가격 인하되어 4%대 저리 대출 효과

\* 단, '26년 이후 정부 출·융자 없이 HUG 자체 자금조달 예정으로, 환매가격 상승가능성 有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p>□ 생애 최초 주택 감면</p> <p>○ (상시거주) <u>정당한 사유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중여·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추정</u></p> <p>○ (추가 주택 취득 제한) <u>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상속 주택 제외) 추정</u></p> <p>○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임차인으로서 1년 이상 상시 거주한 주택을 <u>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여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은 경우(추정된 경우 제외)</u></p>	<p>□ 상시거주 추정요건 완화</p> <p>○ 생애최초 주택을 <u>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중여·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추정</u></p> <p>*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잔여 임대차기간 1년 이내 限)</p> <p><u>&lt;삭 제&gt;</u></p> <p>○ <u>좌동 : 일몰 종료</u></p>

## □ 개정내용

- (상시 거주)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추징하는 것으로 상시거주 추징요건 완화
- \*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잔여 임대차기간 1년 이내 限)
- (추가 주택 취득 제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추징되지 않도록 추징 폐지
- (취득자) 취득자 본인을 대한민국 국민인 성년자로 명확화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1년 이상 상시거주한 소형주택을 취득('24~'25년)하여 생애 최초 주택 감면을 받은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보아 추후 다른 주택 취득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 유지 일몰 종료

## □ 적용요령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부칙 §1)
-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징\*

\* 예) ① 2024년 1월 취득하여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다가 2025년 11월 매각  
: 종전규정에 따라 추징

② 2024년 1월 취득하여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다가 2025년 11월 직장이전으로 전출하였으나 추징사유 발생없이 2027년 2월 매각 : 개정규정 적용(추징제외)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u>본인</u>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 <u>본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한다)</u> -- ----- ----- ----- ----- ----- ----- <u>-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u> <u>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u> <u>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u> ----- ----- ----- ----- ----- ----- ----- ----- <u>2028년 12월 31일</u> ----- ----- ----- ----- -----.

개정 전	개정 후
<p>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p> <p>가. ~ 다. (생략)</p> <p>&lt;신설&gt;</p> <p>2. (생략)</p> <p>② · ③ (생략)</p> <p>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p>	<p>1. ----- ----- -----이 조에 서----- ----- -----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p>



개정 전	개정 후
<p><u>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u></p> <p>2. <u>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u></p> <p>3. <u>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u></p> <p>⑤ (생략)</p>	<p><u>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u></p> <p>⑤ (현행과 같음)</p>

## ■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5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의 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 3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p><u>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3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u></li> <li><u>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u></li> <li><u>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u></li> </ol>	<p><u>&lt;삭 제&gt;</u></p>

개정 전	개정 후
<p><u>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u></p>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input type="checkbox"/> (감면대상 주택)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u>출산일부터 5년 이내 취득 주택</u> <input type="checkbox"/> ‘ <u>생애최초 취득 주택 감면(§36의3)</u> ’ 규정 인용 <input type="checkbox"/> (감면내용) 취득세 100% (500만원 限)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input type="checkbox"/> (추징 요건) <u>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등</u> <input type="checkbox"/> (추징배제) <u>기존 거주자의 퇴거 지연 등으로 상시거주 지연</u>	<input type="checkbox"/> 감면대상 확대 및 명확화 등 <input type="checkbox"/> <u>1자녀당 1주택 감면 명확화</u> - <u>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u> <input type="checkbox"/> <u>감면 조문에서 직접 규정</u> - 주택 정의, 산출세액 등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합리화 <input type="checkbox"/> (추징요건 합리화) <u>주택 취득일부터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등(상시거주 요건 삭제)</u> <input type="checkbox"/> (추징배제 요건 삭제) ※ 상시거주를 감면요건에서 제외함에 따라, 추징배제 요건 불요

☐ 개정내용

- 여전히 출산율이 저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출산율 제고,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 지원 등을 위하여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 1. 감면대상·세율 등 명확화 >

- 생애최초 감면(§36-3)에서 인용하던 배우자·주택의 정의를 별도로 신설하고, 산출세액의 정의를 추가하여 정합성 제고(유상 외 무상거래 및 신축 등 세율이 적용)

< 출산·양육 및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규정 비교표 >

구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36의3)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36의5)
목적	내집 마련 지원 및 주택 시장 활성화	출산 장려 및 안정적 양육 환경 지원
감면대상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
감면한도	200만원	500만원

- 감면대상 주택에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한다는 표현을 추가하여, 감면신설 당시의 입법취지 명확화

## < 2. 사후관리 합리화 >

- 사후관리 요건을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 또는 타 용도 사용’으로 완화하여 세정운영 합리화

※ 감면 및 추징요건에서 ‘상시 거주’를 삭제하였으므로, 내국인·외국인 부부가 자녀 출산시 출산·양육용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적용 가능

##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6)
-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6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부칙 §6)

\* 예) ① 2024년 1월 취득하여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다가 2025년 11월 매각  
: 종전규정에 따라 추징

② 2024년 1월 취득하여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다가 2025년 11월 직장이전으로 전출하였으나 추징사유 발생없이 2027년 2월 매각 : 개정규정 적용(추징제외)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전	개정 후
<p>1. 2.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p> <p>2.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 ■ 법률 부칙

제6조(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6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견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재산세 35%</li> </ul> </li> <li>○ 대기업(과밀억제권역 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재산세 35%</li> </ul> </li> <li>○ 초기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재산세 50%</li> </ul> </li> <li>○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 60%·재산세 50%</li> </ul> </li> <li>○ 추가감면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성장·원천기술 15% 추가 감면</li> </ul> </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건축물 취득 후 1년(신·중축 대수선의 경우 2년)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받지 못한 경우</li> <li>○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li> <li>○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연구소 폐쇄하거나 타 용도 사용시</li> </ul>	<input type="checkbox"/> 감면 확대 및 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취득세·재산세 45%</li> <li>- 비수도권 취득세·재산세 60%</li> </ul> </li> <li>○ 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수도권 취득세·재산세 35%</li> </ul> </li> <li>○ 그 밖의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취득세·재산세 30%</li> <li>- 비수도권 취득세·재산세 45%</li> </ul> </li> <li>○ 추가감면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국가전략기술</u> 15% 추가 감면</li> </ul> </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ul>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정당한 사유 없이</u> 토지, 건축물 취득 후 1년(신축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2년)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받지 못한 경우</li> <li>○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u>국가전략기술</u> 관련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li> <li>○ (좌동)</li> </ul>



## □ 개정내용

### < 1. 감면율 차등 적용 >

-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소재지(수도권\*·비수도권 등)에 따른 감면율 차등 적용하고, 담세력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대기업·중소기업 등)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 \*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은 제외
- (중소기업 감면) 수도권(45%)·비수도권(60%)으로 감면율 차등하여 적용
- (대기업 감면) 감면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비수도권으로 축소하되,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은 현행 유지(35%)
- (그 밖의 기업 감면) 수도권(30%)·비수도권(45%)으로 감면율 차등하여 적용하고, 초기 중견기업은 감면세액이 소액인 점 등 고려하여 그 밖의 기업으로 일원화

### < 2. 추가감면대상 확대 >

-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추가 감면 도입

####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비교표 >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정의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 있는 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①미래형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소프트웨어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⑭방위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2] ①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④디스플레이, ⑤수소, ⑥미래형 이동수단, ⑦바이오·의약품, ⑧인공지능

※ (총괄) 개정 전·후 감면율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기본	신성장·원천 (+15%p)	기본		신성장·원천 및 국가전략기술 (+15%p)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대기업	취·재 35% 과밀억제권역外	취·재 50%	감면 종료	취·재 35%	-	취·재 50%
기업	취·재 35%	취·재 50%	취·재 30%	취·재 45%	취·재 45%	취·재 60%
초기중견	취·재 50%	취·재 65%				
중소기업	취 60% 재 50%	취 75% 재 65%	취·재 45%	취·재 60%	취·재 60%	취·재 75%

< 3. 사후관리 합리화 >

- 추정조문에 ‘정당한 사유’를 추가하여 사후관리를 합리화하고,
  - 신축의 경우 비교적 공사소요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2년으로 유지하고, 완화대상이 토지임을 명확화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급적용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감면적용 요령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일부를 **이동·추가**하는 내용 등으로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25.11.28.), 아래의 내용을 **소급 적용**토록 규정

기술	내용	시행일
신성장·원천	① (국가전략기술 이동) 미래형자동차-자율주행차-탑승자 인지 기술	'25.7.1.
	② (추가) 방위산업-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25.7.1.
국가전략	③ (추가) 인공지능 분야, 미래형운송수단-인공지능형 자율운항 등	'25.1.1

2. 조특법 시행령 개정(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감면적용 요령

- ① (기존 신성장 → **현행 국가전략기술 이동**) 미래형자동차-자율주행차-탑승자 인지 기술

지특법 부칙(\$5④)에 따라 신성장 감면 적용			⇒ 조특법 시행령 소급적용을 고려하여 지특법 시행령 부칙 \$5④을 두어 '25년 7.1. 이후 ①기술을 인정받은 경우에 신성장·원천기술에 따른 추가 감면 가능
<div> <div>('25.7.1). 조특법 시행령 시행</div> <div>①기술 이동 (신성장 → 국가전략)</div> </div>	<div> <div>('25.10.1.) 취득</div> <div>①기술 기업부설연구소</div> </div>	<div> <div>('26.1.1). 지특법 시행</div> <div>①기술 국가전략기술 감면</div> </div>	

- ② (신성장·원천기술 **추가**) 방위산업-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신성장 감면가능			⇒ 조특법 시행령 소급적용에 따라 '25년 7.1. 이후 ②기술을 인정받은 경우에 신성장·원천기술에 따른 추가감면 가능
<div> <div>('25.7.1). 조특법 시행령 시행</div> <div>②기술 신설 (신성장)</div> </div>	<div> <div>('25.10.1.) 취득</div> <div>②기술 기업부설연구소</div> </div>	<div> <div>('26.1.1). 지특법 시행령 시행</div> <div>②기술 신성장기술 감면</div> </div>	

- ③ (국가전략기술 **추가**) 인공지능 분야, 미래형운송수단-인공지능형 자율운항 등

국가전략기술 감면불가			⇒ 조특법 시행령 소급적용과 무관하게 지특법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지 않으므로 ③기술 관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추가 감면은 불가
<div> <div>('25.1.1). 조특법 시행령 시행</div> <div>③기술 신설 (국가전략)</div> </div>	<div> <div>('25.10.1.) 취득</div> <div>③기술 기업부설연구소</div> </div>	<div> <div>('26.1.1). 지특법 시행</div> <div>③기술 국가전략기술 감면</div> </div>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illegible]

개정 전	개정 후
<p>&lt;신 설&gt;</p>	<p>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p> <p>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8</p>

개정 전	개정 후
<p><u>&lt;신 설&gt;</u></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p>	<p>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p> <p>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 외의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4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부설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추가로 경감한다.</p>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 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p>

개정 전	개정 후
<p><u>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u></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5)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5)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p>	<p><u>업부설연구소</u></p>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u></li> <li>2. <u>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제2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된 부분에 한</u></li> </ol>





개정 전	개정 후
<p><u>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u></p> <p><u>2.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로 추가 감면된 부분에 한정한다)</u></p> <p><u>3.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u></p>	

## ■ 법률 부칙

제7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경감·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경감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6조제5항에 따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한다.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

개정 전	개정 후
<p>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p> <p>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심의 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별표 7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p>	<p>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호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p> <p>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별표 7에 따른 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p> <p>③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p> <p>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p>

개정 전	개정 후
	<p><u>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호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u></p> <p>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의2에 따른 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p> <p>④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p> <p>⑤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p>

개정 전	개정 후
	<p><u>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또는 별표 7의2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u></p>

#### ■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특례) ① 2025년 7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3조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23조제2항제1호 중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는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제6호바목에 따른 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로 보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제6호바목에 따른 기술의 연구개발비를 포함한다)”로, “별표 7”은 “별표 7(별표 7의2 제6호바목을 포함한다)”로 본다.

②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으로 본다.

## 15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법 §47의4)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신 설	□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 신설 ○ <u>법령상 설치의무 대상이 아닌 숙박시설이 스프링클러 설치시</u> - <u>취득세 면제</u> - <u>재산세 2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u> ○ (일몰기한) <u>2028.12.31.</u>

### □ 개정내용

- 「소방시설법」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숙박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포함) 설치 유인을 통하여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감면 신설
- 스프링클러 설치 非의무대상 숙박시설이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하여 취득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면제(2년간, 이후 3년간 50%)

#### < 소방시설(SP 포함) 설치 관련 행정절차 (「소방시설법」 §6) >

① 숙박시설 건축허가 동의	② 착공 및 감리	③ 완공검사 및 사용승인
▶ (행정기관) 건축허가 시, 관할 소방서 등 동의 요청 ▶ (소방서등) 동의 요청 검토 후 5~10일 내 회신	▶ (사업자등) 소방시설 공사 착공 및 감리자 지정 등 신고 ▶ (소방서등) 수리 통지 및 필요시 보완 요구	▶ (사업자) 완공검사 요청 ▶ (소방서)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 (지자체) 건축물 사용승인

#### < 스프링클러 설치 확인 및 감면 절차 >

공사업자	소방서(소방본부)	지자체(세정과)
▶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및 관할 지자체(세정과)에 공문 통보* * 감면대상(설치의무無 숙박시설)에 한함	▶ 사업주 등이 감면신청 시 관련 정보* 확인 및 처리 * 소방서 등에서 통보한 공문에 감면에 필요한 정보 포함

##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8)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p><u>&lt;신 설&gt;</u></p>	<p>제47조의6(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이하 이 조에서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었던 숙박시설인 건축물을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설비등을 설치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8년</p>

개정 전	개정 후
	<u>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u> <u>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u> <u>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u> <u>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u> <u>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u> <u>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u> <u>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u> <u>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 법률 부칙

제8조(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참고1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관리 소방시설 종류 현황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및 관리대상 소화설비 중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등

구분	설치 기준		설치대상
	면적	기타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	모든 층
특정소방대상물 세부용도별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모든 층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	모든 층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바닥면적 500㎡ 이상, 그 외 1,000㎡ 이상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물류터미널 한정)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 그 외 500㎡ 이상	모든 층
		-	
	조산원, 산후조리원,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바닥면적 600㎡ 이상	모든 층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5,000㎡ 이상	모든 층
	랙식창고	랙이 설치된 바닥면적 1,500㎡ 이상	모든 층
	공장, 창고시설	-	해당시설
		「화재예방법시행령」 별표2에 정하는 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23조제 2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모든 층
		창고시설(물류터미널 한정) 중 바닥면적 합계가 2,500㎡ 이상	
		-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중 바닥면적 합계가 2,500㎡ 이상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 바닥 면적이 500㎡ 이상	
		랙식 창고 중 바닥면적 750㎡ 이상	
	교정 및 군사시설	-	해당 시설
		공장 또는 창고 시설 중 「화재 예방법시행령」 별표2에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등	
	지하가(터미널 제외)	「철도안전법」에 따른 보호시설로서	해당 장소
		「경찰관 직무집행법」 따른 유치장	
		발전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 통로	-	해당장소

##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규정 개정연혁

시행일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비고
'68.0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장, 영화관, 집회장의 무대부 연면적 500㎡ 이상(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300㎡ 이상)</li> <li>카바레, 오락장, 바 등 지하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이 연면적 1,000㎡ 이상</li> <li>백화점 시장 숙박소 등이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이 연면적 1,500㎡ 이상</li> </ul>	최초 제정
'80.0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가로서 바닥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li> </ul>	
'81.1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관, 호텔, 여인숙 용도 건축물의 11층 이상 부분</li> </ul>	
'84.0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층 이상에 여관,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전 층</li> </ul>	
'95.0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층 이상에 여관,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전 층</li> <li>복합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li> </ul>	
'04.0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전 층(아파트의 경우 '05.1.1. 시행)</li> <li>노유자시설,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 연면적 600㎡ 이상은 전층</li> <li>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크식 창고로 연면적 1,500㎡ 이상</li> <li>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li> <li>복합건축물 또는 교육연구시설(기숙사) 연면적 5,000㎡ 이상이면 전층</li> </ul>	4분법
'05.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층 이상의 경우 전층</li> </ul>	
'15.07.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 제외)</li> </ul>	
'18.0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전층</li> </ul>	의정부 아파트 화재
'19.08.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연면적 600㎡ 이상</li> </ul>	밀양 세종병원
'22.0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산원, 산후조리원 연면적 600㎡ 이상</li> </ul>	
'22.12.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모든 층</li> <li>* 간이스프링클러(300~600㎡ 미만)</li> </ul>	제천화재 분법



### 참고3

## 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확인서(안)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서식]

### 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소유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			
완공검사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상호(명칭)	주요 용도		
	소재지 (전화번호 :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스프링클러설비 종 류	[ ] 스프링클러설비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대상 여부	[ ] 여 [ ] 부
소방시설 공사업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			
소방시설 감리업자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			
건축공사 종류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건축허가일	※ 대수선시, 건축물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일 기재			완공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6에 따라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시·도 ○○소방서장

○○ 시·군·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증축·개축·재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2.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알릴 경우에는 원활한 소방활동 및 건축물 등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2.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

3. 「건축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따른 방화벽,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
4.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 ④ 소방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

검·정비를 위하여 폐쇄·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3.>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작동정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⑦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대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해야 한다.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개발용 부동산 ○ 취득세 25%(+조례 25%) ○ (일몰기한) <u>2025.12.31.</u>	<input type="checkbox"/> 감면 재설계 및 연장 ○ 지역별 취득세 감면 재설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감면율</th></tr> </thead> <tbody> <tr> <td>수도권</td><td>취득세 10%(+조례 25%)</td></tr> <tr> <td>비수도권</td><td>취득세 25%(+조례 25%)</td></tr> <tr> <td>인구감소지역</td><td>취득세 40%(+조례 25%)</td></tr> </tbody> </table> ○ (일몰기한) <u>2028.12.31.</u>	구분	감면율	수도권	취득세 10%(+조례 25%)	비수도권	취득세 25%(+조례 25%)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40%(+조례 25%)
구분	감면율								
수도권	취득세 10%(+조례 25%)								
비수도권	취득세 25%(+조례 25%)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40%(+조례 25%)								

## □ 개정내용

- 관광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및 타산업과의 연계효과를 고려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되,
  - 국가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 지역별 감면율 차등 재설계

### <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감면 재설계 >

< 개정 전 >	구분	< 개정 후 >	
취득세 25% (+ 조례 25%)	수도권	취득세 10%(+ 조례 25%)	축소
	비수도권	취득세 25%(+ 조례 25%)	-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40%(+ 조례 25%)	확대

##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다만, 수도권 지역(인구감소지역 제외)의 경우 2026. 1. 1. 전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는 종전 감면 규정 적용(부칙 §9)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p>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li> <li>2.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li> <li>3.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li> </ol>	<p>제54조(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li> <li>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li> <li>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li> </ol>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p>

개정 전	개정 후
<p><u>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u></p> <p>4. <u>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u></p> <p>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이 특1등급 및 특2등급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경감한다.</p> <p>③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p>	<p><u>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u></p> <p>1.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p> <p>2.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p> <p>3.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p> <p>4. <u>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u></p>

개정 전	개정 후
<p><u>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u></p> <p><u>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u> <u>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u> <u>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u> <u>우</u></p> <p><u>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u> <u>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u> <u>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u> <u>는 경우</u></p> <p>④ 삭 제</p> <p>⑤ 다음 각 호의 재단, 기업 및 사</p>	

개정 전	개정 후
<p><u>업시행자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u></p> <p><u>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재단</u></p> <p><u>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u></p> <p><u>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u></p> <p><u>⑥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u></p>	

개정 전	개정 후
<p><u>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선수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u></p> <p><u>1. 평창군에 위치한 대회직접관련 시설 중 선수촌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u></p> <p><u>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대회 이후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3호가목 및 이 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한다.</u></p>	

#### ■ 법률 부칙

제9조(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다.

## 17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감면 연장 및 재설계(법 §58④)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div>□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div> <div>○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부동산<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li></ul><div>※ 재산세는 조례로 15%p 상향 가능</div></div> <div>○ (일몰기한) 2025.12.31.</div>	<div>□ 감면 대상 재설계 및 감면 연장</div> <div>○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부동산<table><tr><th>구분</th><th>취득세</th><th>재산세</th></tr><tr><td>수도권</td><td>35%</td><td>20%</td></tr><tr><td>비수도권</td><td>50%</td><td>35%</td></tr></table><div>※ 재산세 조례로 15%p 상향 가능</div><div>※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은 비수도권 감면을 적용</div></div> <div>○ (일몰기한) 2028.12.31.</div>	구분	취득세	재산세	수도권	35%	20%	비수도권	50%	35%
구분	취득세	재산세								
수도권	35%	20%								
비수도권	50%	35%								

### □ 개정내용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유치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되,
- 국가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 지역별 감면을 차등 재설계

####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재설계 >

< 개정 전 >	구분	< 개정 후 >	
취득세 50% 재산세 35%(조례 +15%p)	수도권	취득세 35%, 재산세 20%(조례 +15%p)	축소
	비수도권	취득세 50%, 재산세 35%(조례 +15%p)	-

###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①)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④ ----- -----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u>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1. ----- ----- ----- ----- ----- <u>취득세의 100분의 5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5]을 2028년 12월 31일</u> ----- -----.
2.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u>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5의 범	2. ----- ----- ----- ----- ----- <u>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u>

개정 전	개정 후
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 가로 경감할 수 있다.	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0]를 2028년 12월 31일----- -----. ----- ----- -----.

#### ■ 법률 부칙

제2조(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3항,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 제58조제4항, 제63조제2항·제3항, 제75조의2제1항·제3항, 제75조  
의4제2항, 제78조의2 본문,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5조 및 제186조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8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법 §58의2①,②)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div>□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div> <div><div>○ 시행자의 직접사용 및 임대·분양 목적 부동산</div><div><div>- 취득세 35%, 재산세 5년간 35%</div></div></div> <div><div>○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div><div><div>- 취득세 35%, 재산세 5년간 35%</div></div></div> <div>○ (일몰기한) 2025.12.31.</div>	<div>□ 감면 재설계 및 감면 연장</div> <div><div>○ 수도권·비수도권 감면을 차등 적용</div><table><tr><th>구분</th><th>취득세</th><th>재산세</th></tr><tr><td>수도권</td><td>15%</td><td>15%</td></tr><tr><td>비수도권</td><td>35%</td><td>35%</td></tr></table><div>※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은 비수도권 감면을 적용</div></div> <div><div>○ (현행과 같음)</div><div>○ (일몰기한) 2028.12.31.</div></div>	구분	취득세	재산세	수도권	15%	15%	비수도권	35%	35%
구분	취득세	재산세								
수도권	15%	15%								
비수도권	35%	35%								

### □ 개정내용

- 도시 내 산업입지 고도화 등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관련 감면을 3년 연장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 대해 지역별 감면을 차등

#### <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 대한 감면 재설계 >

< 개정 전 >	구분	< 개정 후 >	
취득세 35% 재산세 35%	수도권	취득세 15%, 재산세 15%	축소
	비수도권	취득세 35%, 재산세 35%	-

###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 법 시행 전 수도권 지역에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종전 규정 적용(부칙 §10)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2025년 12월 31일</u> 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u>2028년 12월 31일</u>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u>100분의 35</u> 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	1. ----- ----- ----- ----- ----- ----- ----- ----- ----- ----- ----- ----- <u>100분의 35</u>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

개정 전	개정 후
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해서는 100분의 15]----- -. -----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u>100분의 35</u> 를 경감한다.	2. ----- ----- ----- ----- ----- ----- -----100 분의 3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② ----- ----- ----- ----- ----- ----- ----- ----- ----- -----.

개정 전	개정 후
<p>1.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가.·나. (생략)</p> <p>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p>	<p>1. <u>2028년 12월 31일</u>----- ----- ----- ---, ----- ----- ----- -----.</p> <p>가.·나. (현행과 같음)</p> <p>2. ----- ----- ----- ----- ----- -----<u>2028년 12월 31일</u>----- -----.</p>

#### ■ 법률 부칙

제10조(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방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9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감면을 축소(법 §63①,②)

### 1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가철도공단 부동산 및 철도 차량 지방세 감면 <input type="radio"/> 철도시설용 부동산 : 취득세 25% <input type="radio"/> 국가 등 귀속 철도차량 및 부동산 : <u>취득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100%</u> ※ 최소납부세제 배제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u>2025.12.31.</u>	<input type="checkbox"/> 감면을 축소 및 연장 <input type="radio"/> (현행과 같음) <input type="radio"/> 국가 등 귀속 철도차량 및 부동산 : <u>취득세·재산세 100%(반대급부 無), 50%(반대급부 有)</u> ※ 최소납부세제 배제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u>2028.12.31.</u>

### □ 개정내용

- 교통 인프라 개선 등 공익성 고려하여 감면을 3년 연장하되,
  - 지방세 특례 원칙에 따라 목적세적 성격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은 정비
  - 세목간 정합성(§73의2),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반대급부 유·무에 따라 감면을 차등 적용
    - ※ 농어촌공사(§13③), LH(§76②), 수자원공사(§77②), 지방공기업(§85의2①4)
- 공단이 건설한 철도시설 등 자산과 그와 관련된 부채는 사업이 끝나는 때 국가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나(「국가철도공단법」 §24조)
  - 공단이 국가로부터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철도시설과 관련된 부채는 국가가 승계하지 않고 공단이 선로사용료를 받아 회수
    - ※ 건설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발행(공단) → 고속철도 건설(국비30% 공단70%) → 국가 귀속 → 고속철도순이익(선로사용료-유지보수비-이자비용)으로 건설비 회수 (공단 부채가 회수될때까지 장기간 철도시설관리권 설정)
- ⇒ 공단이 고속철도시설자산을 준공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6에 따라 취득한 고속철도시설관리권은 반대급부에 해당
  - ※ 일반철도(국비100%) 및 광역철도(국비70%, 지방30%)에 공단의 목적사업인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갱신되어 설정되는 철도시설관리권의 경우는 반대급부 미해당

##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이 조에서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 <u>2028년 12월 31일</u> ----- -.
② 국가철도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u>재산세</u>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u>부과액을 포함한다</u> )를 각각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단서 신설>	② ----- ----- ----- ----- <u>재산세</u> ----- ----- <u>2028년 12월 31일</u> ----- <u>다만,</u> <u>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u>

개정 전	개정 후
<p>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p> <p>2. (생략)</p>	<p><u>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귀속 또는 기부채납한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정감한다.</u></p> <p>1. -----<u>지방자치단체조합</u>----- ----- ----- -----</p> <p>2. (현행과 같음)</p>

■ 법률 부칙

제2조(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3항,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8조제4항, **제63조제2항·제3항** … 중략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0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감면 축소(법 §63③)

### 1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한국철도공사 부동산 및 철도 차량 지방세 감면 <input type="radio"/>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2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input type="radio"/> 일반철도차량 : 취득세 50% ※ 고속철도 : 취득세 25%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u>2025.12.31.</u>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및 도시지역분 정비 <input type="radio"/>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25%, 재산세 50% <input type="radio"/> (현행과 같음)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u>2028.12.31.</u>

### ☐ 개정내용

- 교통 편익 증진 등 공익성 고려하여 감면을 3년 연장하되,
  - 지방세 특례 원칙에 따라 목적세적 성격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은 정비

###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③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같은 호의 사업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사업(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생략)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③ ----- ----- ----- --2028년 12월 31일----- -----. 1. ----- ----- ----- ----- ----- ----- ----- -----재산세----- ----- ----- 2. (현행과 같음)

#### ■ 법률 부칙

제2조(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3항,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8조제4항, 제63조제2항·제3항 … 중략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1 수소전기화물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법 §66⑥)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고시된 수소전기화물자동차 <input type="radio"/> 취득세 50% 감면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u>2025.12.31.</u>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input type="radio"/> (현행과 같음)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u>2028.12.31.</u>

### □ 개정내용

- 수소전기화물차보급 확대를 위해 감면 3년 연장

#### 【운영상 유의사항】

- ❖ 수소전기화물자동차와 전기화물자동차 구분 필요
  - 「지특법」 제66조제6항의 감면대상은 ①「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②「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5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중 ③「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로 한정('24.12월 현재 00사 엑시언트 1종)
- ⇒ 전기화물자동차의 경우 반드시 「지특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감면 적용

### □ 적용요령

- 2026. 1. 1. 부터 시행(부칙 §1)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① ~ ⑤ (생략)	⑥ ----- ----- ----- ----- ----- ----- ----- ----- ----- ----- -----
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u>2025년 12월 31일</u> 까지 경감한다.	----- <u>2028년 12월 31일</u> ----- -----.

## ■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2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법 §71①,②)

### 1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물류단지 부동산 감면 <input type="radio"/> 사업시행자 - 취득세 35%, 재산세 25%* * 조례 10% 추가 可  <input type="radio"/> 입주기업 - 취득세 50% · 재산세 35%(5년)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2025.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및 재설계 <input type="radio"/> 사업시행자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역</th><th>감면율</th></tr> </thead> <tbody> <tr> <td>수도권</td><td>취 25% 재 15%</td></tr> <tr> <td>비수도권</td><td>취 35% 재 25%</td></tr> <tr> <td>인구감소지역</td><td>취 50% 재 35%</td></tr> </tbody> </table> <input type="radio"/> 입주기업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역</th><th>감면율</th></tr> </thead> <tbody> <tr> <td>수도권</td><td>취 35% 재 25%(5년)</td></tr> <tr> <td>비수도권</td><td>취 50% 재 35%(5년)</td></tr> <tr> <td>인구감소지역</td><td>취 75% 재 50%(5년)</td></tr> </tbody> </table>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2028.12.31.	지역	감면율	수도권	취 25% 재 15%	비수도권	취 35% 재 25%	인구감소지역	취 50% 재 35%	지역	감면율	수도권	취 35% 재 25%(5년)	비수도권	취 50% 재 35%(5년)	인구감소지역	취 75% 재 50%(5년)
지역	감면율																
수도권	취 25% 재 15%																
비수도권	취 35% 재 25%																
인구감소지역	취 50% 재 35%																
지역	감면율																
수도권	취 35% 재 25%(5년)																
비수도권	취 50% 재 35%(5년)																
인구감소지역	취 75% 재 50%(5년)																

### □ 개정내용

- 물류비용 절감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감면을 3년 연장하고,
  - 국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및 인구감소지역별로 감면율 차등을 두어 재설계

###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11)
  - 다만, 수도권 지역 사업시행자가 이 법 시행 전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 수도권 지역 입주기업이 이 법 시행 전 취득한 물류시설용 부동산(5년 내)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종전 규정 적용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u>취득세의 100분의 35</u> 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u>재산세의 100분의 25</u> 를 각각 <u>2025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u>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u>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u>취득세</u> ----- ----- ----- <u>재산세를</u>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u>2028</u> <u>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단 서 삭제>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

개정 전	개정 후
<p><u>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u></p> <p>2. <u>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u></p> <p>3. <u>「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u></p> <p>4. <u>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u></p> <p>② <u>물류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하 이 항에서 “물류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u></p>	<p><u>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u></p> <p>2. <u>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u></p> <p>3. <u>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한다.</u></p> <p>② ----- ----- ----- ----- ----- ----- ----- -----다</p>

개정 전	개정 후
<p>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u>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u></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③ (생 략)</p> <p>&lt;신 설&gt;</p>	<p>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p> <p>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p> <p>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한다.</p> <p>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p>

개정 전	개정 후
	<p><u>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u></li> <li>2. <u>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u></li> <li>3. <u>「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u></li> <li>4. <u>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u></li> </ol>



■ 법률 부칙

제1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p><input type="checkbox"/>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p> <p>○ (도시개발사업)</p> <p>- 시행자 : 체비지·보류지 취득세 75% 감면</p> <p>○ (주거환경개선사업)</p> <p>- 시행자 : 대지조성용 주택 및 체비지·보류지 취득세 75% 감면</p> <p>- 부동산소유자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취득세 면제</p> <p>○ (재개발사업)</p> <p>- 시행자 : 대지조성용 부동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 주택 취득세 50% 감면</p> <p>- 부동산소유자 :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취득세 75% 감면, 60㎡초과 85㎡이하 주택 취득세 50% 감면 (1가구 1주택 限)</p> <p>○ (일몰기한) <u>2025.12.31.</u></p> <p>※「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232호, 2023.3.14.) 부칙 제11조 : 2023.1.1. 이전 환지계획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 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부동산의 소유자 취득 부동산 종전 규 정에 따라 <u>2025.12.31.까지 감면</u></p>	<p><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p> <p>○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p>※ 부동산소유자 범위에 상속인 포함</p> <p>○ (현행과 같음)</p> <p>※ 부동산소유자 범위에 상속인 포함</p> <p>○ (일몰기한) <u>2028.12.31.</u></p> <p>※「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232호, 2023.3.14.) 부칙 제11조 : <u>2028.12.31.</u> 까지 감면 연장</p>

## □ 개정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 부동산소유자의 범위에 상속인을 포함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232호, 2023.3.14.) 부칙 제11조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감면기한을 3년 연장

## □ 적용요령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부칙 §1)

## ②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생략)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2028년 12월 31일</u> ----- -----. ④ ----- ----- ----- -----

개정 전	개정 후
<p>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1. 2. (생략)</p> <p>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u>소유자</u>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p> <p>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p>	<p>-----</p> <p>-----<u>2028년 12월 31일</u>-----.</p> <p>-----</p> <p>-----</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 -----</p> <p>-----</p> <p>-----<u>소유자</u> (<u>상속인을 포함한다</u>)-----</p> <p>-----</p> <p>-----</p> <p>-----</p> <p>-----.</p> <p>⑤ -----</p> <p>-----</p> <p>-----</p>

개정 전	개정 후
<p>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1. 2. (생략)</p> <p>3.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u>소유자</u>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p>	<p>----- ----- -----20 <u>28년 12월 31일</u>-----.</p> <p>----- ----- ----- -----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u>----- ----- ----- ----- ----- ----- -----.</p>

[illegible]

개정 전	개정 후
<p><u>025년 12월 31일</u>”로 본다.</p> <p>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74조제5항제3호에 따라 <u>2025년 12월 31일</u>까지 그 취득세를 경감한다.</p> <p>③ (생략)</p>	<p>② ----- ----- -----<u>2028년 12월 31일</u>-----.</p> <p>③ (현행과 같음)</p>

■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에 대한 감면 <input type="radio"/> (감면대상)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 <input type="radio"/> (감면율) 취득세·재산세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적용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2025.12.31. <신 설>	<input type="checkbox"/> 재산세 감면기간 설정 및 감면 연장 <input type="radio"/> 좌동 <input type="radio"/> (취득세) 좌동 <input type="radio"/> (재산세) <u>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50% 범위에서, 그 다음 3년간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적용</u> ※ 조례 연계 개정 必 <input type="radio"/> 2028.12.31. <input type="radio"/> (창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준용

## □ 개정내용

-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되, 재산세 감면기간 최대 8년 설정(최초 5년간 50%, 그 다음 3년간 25% 조례 감면 可 )
- 국세\*와 동일하게 창업의 범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준용 규정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 □ 적용요령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부칙 §1)

-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u>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u>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u>취득세의</u> ----- ----- <u>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u> ----- -----.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	1. ----- ----- <u>20</u>

개정 전	개정 후
발구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8년 12월 31일-----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	3. ----- ----- ----- ----- -----2028년 12월 31일----- ----- ----- ----- ----- ----- ----- ----- ----- ----- ----- ----- ----- -----

개정 전	개정 후
<p>합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p> <p>4. (생 략)</p> <p>② (생 략)</p> <p><u>&lt;신 설&gt;</u></p>	<p>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p>

#### ■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2조(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3항,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8조제4항, 제63조제2항·제3항, 제75조의2제1항·제3항, 제75조의4제2항, 제78조의2 본문,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5조 및 제18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p>제35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①·② (생 략)</p> <p>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5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 -----.</p>

## 25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법 §75의4, 영 §35-5)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p>□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 면제</li> </ul> </li> <li>○ 감면대상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법§58-3④ 인용)</li> </ul> </li> <li>○ 사업장 이전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밀억제권역에서 반환공여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li> </ul> </li> <li>○ (신설)</li> <li>○ (일몰기한) <u>2025.12.31.</u></li> </ul>	<p>□ 감면 연장 및 재설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과 같음)</li> <li>○ 감면대상 업종(영§3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표2 신설</li> </ul> </li> <li>○ 사업장 이전의 범위(영§3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수도권</u>에서 반환공여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li> </ul> </li> <li>○ <u>창업의 의미 명확화</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분할, 현물출자, 법인전환 등</li> </ul> </li> </ul> </li> <li>○ (일몰기한) <u>2028.12.31.</u></li> </ul>

### □ 개정내용

-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각종 규제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 연장
-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그 취지가 상이하고, 반환공여구역 등은 정책적으로 강화된 지원이 필요하므로, 감면 취지에 맞춘 감면 업종 신설
  - ※ 기존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 외 야영장업, 의료업, 노인복지시설 등 추가

구 분	창업중소기업 감면(「지특법」 §58의3)	반환공여구역 감면(「지특법」 §75의5)
감면취지	창업 비용 경감을 통한 창업 활성화 유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에 대한 경제진흥
감면대상	창업 기업	창업 또는 사업장 이전·신설 기업
적용범위	과밀억제권역 外 모든 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 수도권 경제 집중도 완화를 위하여 사업장 이전의 감면요건을 (개정前) 과밀억제권역에서 (개정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로 감면대상 확대
  - └ (개정 前)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파주·용인·화성·평택 등)에서 반환 공여구역 등으로 이전시, 감면 배제
  - └ (개정 後)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파주·용인·화성·평택 등)에서 반환 공여구역 등으로 이전시, 감면 적용
- ※ 다만, 수도권 내 반환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은 제외
- ‘창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인용함으로써 조문간 형평성 및 정합성 제고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5.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u>2028년 12월 31일</u>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창업을 범위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 법률 부칙

제2조(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3항,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8조제4항, 제63조제2항·제3항, 제75조의2제1항·제3항, 제75조의4제2항, 제78조의2 본문,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5조 및 제18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의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법 제7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제35조의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법 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별표 2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표 제8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표 제9호에 따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② 법 제7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장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서 이전하는 사	② 법 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 ----- ----- ----- ----- 수도권 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

개정 전	개정 후
업장으로 한정한다.	<u>지역은 제외한다</u> )-----.

■ 지특법 시행령 부칙

제3조(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2]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창업 업종의 범위(제35조의5제1항 관련)

1. 건설업
2. 광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가.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 다.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라.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마.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제29조의2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 가. 광고업
  - 나.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다.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라. 연구개발업
  - 마. 전문 디자인업
6.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나. 뉴스 제공업
  - 다.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7. 제조업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산업
  - 가.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 나. 보관 및 창고업
  - 다.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 라. 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마. 화물 취급업
  - 바.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사. 화물 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 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

- 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
9.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0.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및 테마파크업
  11.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13.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1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1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
  18.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 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
  19.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2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아목에 따른 관광식당업 및 관광펜션업

## 참고1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6. 4.>

구분	기초지방자치단체(30개)	행정구역(178개)
합계	시(20개) · 군(7개) · 구(3개)	읍(20개) · 면(62개) · 동(96동)
부산광역시 (6개)	부산진구(6동)	양정1동, 연지동, 범전동, 개금3동, 부전1동, 부암1동
대구광역시 (11개)	남구(11동)	봉덕1동, 봉덕2동, 봉덕3동, 대명1동, 대명2동, 대명3동, 대명5동,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0동, 이천동
인천광역시 (6개)	부평구(6동)	산곡1동,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부평1동, 부평3동
경기도 (102개)	성남시(1동)	북정동
	고양시(3동)	고봉동, 관산동, 고양동
	의정부시(15동)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송산1동, 송산2동, 호원1동, 호원2동, 신곡1동, 신곡2동, 자금동, 녹양동, 장암동
	남양주시(2읍 · 2면)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조안면
	평택시(2읍 · 4면 · 5동)	팽성읍, 안중읍, 청북면,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중앙동, 서정동, 세교동
	화성시(1읍 · 2면 · 1동)	우정읍, 장안면, 서신면, 남양동
	파주시(5읍 · 9면 · 2동)	조리읍,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교하읍, 월롱면, 광탄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적성면, 파평면, 탄현면, 진서면, 금촌1동, 금촌2동
	포천시(1읍 · 9면 · 2동)	소흘읍, 영중면, 창수면, 영북면, 관인면, 일동면, 이동면, 군내면, 가산면, 신북면, 선단동, 포천동
	광주시(2면)	남종면, 중부면
	하남시(7동)	천현동, 감북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

		1동, 춘궁동, 초이동
	양주시(1읍·4면·6동)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장흥면, 양주1동, 양주2동,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회천4동
	동두천시(7동)	생연1동, 생연2동, 중앙동, 보산동, 불현동, 소요동, 상패동
	연천군(2읍·6면)	전곡읍, 연천읍, 장남면, 미산면, 군남면, 왕징면, 백학면, 청산면
	양평군(1면)	양동면
강원 특별자치도 (27개)	춘천시(4동)	근화동, 소양동, 약사명동, 강남동
	원주시(3면·5동)	소초면, 호저면, 지정면, 태장1동, 태장2동, 우산동, 봉산동, 행구동
	태백시(1동)	문곡소도동
	횡성군(1읍·7면)	횡성읍, 서원면, 청일면, 공근면, 갑천면, 둔내면, 우천면, 강림면
	영월군(1읍·2면)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홍천군(2면)	동면, 서석면
	철원군(1읍)	갈말읍
경상북도 (17개)	포항시(1읍·14동)	홍해읍, 죽도1동, 죽도2동, 중앙동, 해도1동, 용흥동, 상대1동, 상대2동, 대이동, 장량동, 두호동, 우창동, 환여동, 학산동, 양학동
	봉화군(2면)	춘양면, 소천면
경상남도 (6개)	사천시(1읍·3면)	사천읍, 축동면, 사남면, 정동면
	진주시(2면)	정촌면, 금곡면
제주특별 자치도 (3개)	서귀포시(1읍·1면)	대정읍, 안덕면
	제주시(1면)	한경면

## 26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법 §75의5, 영 §35의6)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p>□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등에 대한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 면제</li> <li>- 재산세 5년 100% + 3년 50%</li> </ul> </li> <li>○ 감면대상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법§58-3④ 인용)</li> </ul> </li> <li>○ 사업장 이전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밀억제권역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li> </ul> </li> <li>○ (신설)</li> <li>○ 사후관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일부터 1년 경과시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li> </ul> </li> <li>○ 일몰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12.31.까지</li> </ul> </li> </ul>	<p>□ 감면 연장 및 재설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li>○ 감면대상 업종(영§3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표2 신설</li> </ul> </li> <li>○ 사업장 이전의 범위(영§3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수도권</u>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li> </ul> </li> <li>○ <u>창업의 의미 명확화</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규정</li> </ul> <p>* 합병·분할, 현물출자, 법인전환 등</p> </li> <li>○ 사후관리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일부터 1년 경과시(<u>신축시 해당 토지는 2년</u>)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li> </ul> </li> <li>○ 일몰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28.12.31.까지</u></li> </ul> </li> </ul>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 인구감소지역 주택

- ① 3억원 이하
- ②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 (접경지역 제외),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 제외 지역
- ③ 동일 시·군·구 소재 주택이 아닐 것

- (신설)

- 취득세 25% ※ 조례로 25% 추가 가능

□ 감면 확대 및 감면한도 신설 등 (법§75-5, 영§35-6)

- (지원지역 확대) 비수도권 인구 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
- (취득원인 확대) 신축으로 취득하는 경우 추가

- 인구감소지역 주택

- ① 12억원 이하(수도권 내 접경 지역은 3억원)
- ②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 (접경지역 제외),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 제외 지역
- ③ 동일 시·군·구 소재 주택이 아닐 것
- ④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이 아닐 것

-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 ① 3억원 이하
- ②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외 지역
- ③ 동일 시·군·구 소재 주택이 아닐 것
- ④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이 아닐 것

- 감면한도 150만원 신설

- 법률에 따른 감면한도 75만원
- 조례로 추가감면시 150만원

※ 감면대상 주택 취득가액을 상향하며 한도 신설

□ (신설)

□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법§75-5, 영§35-6)

○ 사원에게 임대·무상 제공용으로 취득하는 주택·기숙사 등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 다가구 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호수부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1)에 따른 일반기숙사

-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 취득세 50%

※ 조례로 25% 추가 가능

○ 사후관리 규정

- 취득일부터 1년 경과시(신축시 해당 토지는 2년)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직접 사용일부터 2년 미만에 매각·증여 또는 타 용도 사용

## 1

## 창업 및 사업장신설·이전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재설계

- 생활인구 유입 증가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 연장
-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그 취지가 상이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정책적으로 강화된 지원이 필요하므로, 감면 취지에 맞춘 감면 업종 신설

※ 기존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 외 야영장업, 의료업, 노인복지시설 등 추가

구 분	창업중소기업 감면(「지특법」 §58의3)	인구감소지역 감면(「지특법」 §75의5)
감면취지	창업 비용 경감을 통한 창업 활성화 유도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활성화 및 인구 유입
감면 대상	창업 기업	창업 또는 사업장 이전·신설 기업
적용 범위	과밀억제권역 외 모든 지역	인구감소지역에 한함(89개 시·군·구)

- 수도권 경제 집중도 완화를 위하여 사업장 이전의 감면요건을 (개정前) 과밀억제권역에서 (개정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로 감면대상 확대
  - └ (개정 前)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파주·용인·화성·평택 등)에서 인구 감소지역으로 이전시, 감면 배제
  - └ (개정 後)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파주·용인·화성·평택 등)에서 인구 감소지역으로 이전시, 감면 적용
- ※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은 제외
- ‘창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인용함으로써 조문간 형평성 및 정합성 제고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5.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신축의 경우 비교적 공사소요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사후관리를 합리화



## 2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확대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25.8.14. 경제관계장관회의)과 관련하여  
세컨드홈 감면대상지역 확대 및 감면요건 완화

구 분	현 행	개 정
<b>인구감소지역</b> 광역시(5개구) 외 84개 지역	주택 가액 기준 3억원	<b>주택 가액 기준 상향</b> 「수도권* : 3억원 「비수도권 : 12억원 * 강화·웅진·연천·가평
<b>인구감소 관심지역</b> 강릉·익산·경주 등 9개 지역 ※ 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 신 설 >	<b>주택 가액 기준 3억원</b> ※ 현행 인구감소지역과 동일

- (지역) 현행 인구감소지역(광역시 5개 구 제외, 84개 시·군)에서 '인구감소  
관심지역\*(수도권·광역시 9개 구 제외, 9개 시·군)'까지 확대

\* 특별시를 제외한 시·군·구 중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곳으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2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방분권균형발전법」 §2-12, '25.11.28. 시행)

※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세컨드홈 특례 적용 지역(9개 시·군)

(강원) 강릉·동해·속초시,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김천시, (경남) 사천·통영시

- (가액) 감면대상 주택의 기준을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다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유사 감면제도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감면액의 상한을 150만원으로 설정

\*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등 기존 주택 실수요자 감면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한도 설정(예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200만원 한도, 출산·양육주택 500만원 한도)

※ 양도·종부·재산세는 세컨드홈 특례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 (취득사유 추가) 기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 외에 신축으로  
인한 취득을 감면요건에 추가

※ 토지 매입 후 주택 신축시, 신축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에 한하여 감면대상이며,  
취득당시 가액(공사비용)이 3억원 또는 12억원 이하인 경우에 감면(토지 감면대상×)

## 3

##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기숙사에 대한 감면 신설

- 기업 사원의 정주여건 개선·기업 부담완화 등을 위하여 사원에게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인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 및 전용면적 85㎡이하인 호수 부분 한정)
  -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1)에 따른 일반기숙사\*
    - \*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토지) 상기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일반기숙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신설·이전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과 동일하게 사후관리 규정 신설
  - 취득일부터 1년 경과시(신축시 해당 토지는 2년\*)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및 직접 사용일부터 2년 미만에 매각·증여 또는 타 용도 사용시 추징
    - \* 신축의 경우에 한하여 비교적 공사소요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 고려하여 유예 기간을 2년으로 규정

##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12)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 <u>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u> 」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u>인구감소지역</u> ----- ----- ----- ----- ----- ----- ----- ----- ----.
1.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취득세를 면제한다.	1. <u>2028년 12월 31일</u> ----- -----.
2.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23년 1월 1일부터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취득한 부동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 ----- ----- <u>2028년 12월 31일</u> ----- ----- ----- ----- ----- -----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

개정 전	개정 후
<p><u>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u></p> <p><u>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u></p> <p><u>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u></p> <p><u>③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u></p>	<p><u>위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u></p> <p><u>③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u></p> <p><u>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u></p> <p><u>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u></p>

개정 전	개정 후
<p>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lt;신 설&gt;</p>	<p>용하는 경우</p> <p>④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거나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한다.</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경감받는 세액과 제4항에 따라 경감받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p>

개정 전	개정 후
<p><u>&lt;신 설&gt;</u></p>	<p>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u>&lt;신 설&gt;</u></p>	<p>⑦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p>
<p><u>&lt;신 설&gt;</u></p>	<p>⑧ 제7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1. <u>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u></p>

개정 전	개정 후
	<u>지 아니하는 경우</u> <u>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u> <u>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u> <u>·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u> <u>용하는 경우</u>

#### ■ 법률 부칙

제1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5조의5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7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5조의5제2항에 따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① 법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 ----- -----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업종-----.
② 법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장은 <u>과밀</u>	② ----- ----- ----- ----- ----- -----.

개정 전	개정 후
<p><u>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u></p> <p>③ <u>법 제75조의5제3항 전단에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지방세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p> <p>④ <u>법 제75조의5제3항 전단에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p>	<p><u>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u></p> <p>-----</p> <p>-----</p> <p>-----.</p> <p>③ <u>법 제75조의5제4항 본문</u>-----</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④ <u>법 제75조의5제4항 본문에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p>



개정 전	개정 후
<p><u>택을 말한다.</u></p> <p>1.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u>취득당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u></p> <p>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p> <p>3. 제3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 해당 1가구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p>	<p><u>택을 말한다.</u></p> <p>1. 「지방세법」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에 따른 <u>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2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u></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p> <p>가.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p> <p>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 관심지역 중 수도권,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p> <p>3.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p> <p>4. 제3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 해당 1가구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의 관할</p>

개정 전	개정 후
<p><u>&lt;신 설&gt;</u></p>	<p>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p> <p>⑤ 법 제75조의5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li> <li>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li> <li>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1)에 따른 일반기숙사</li> <li>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일반기숙사를 건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li>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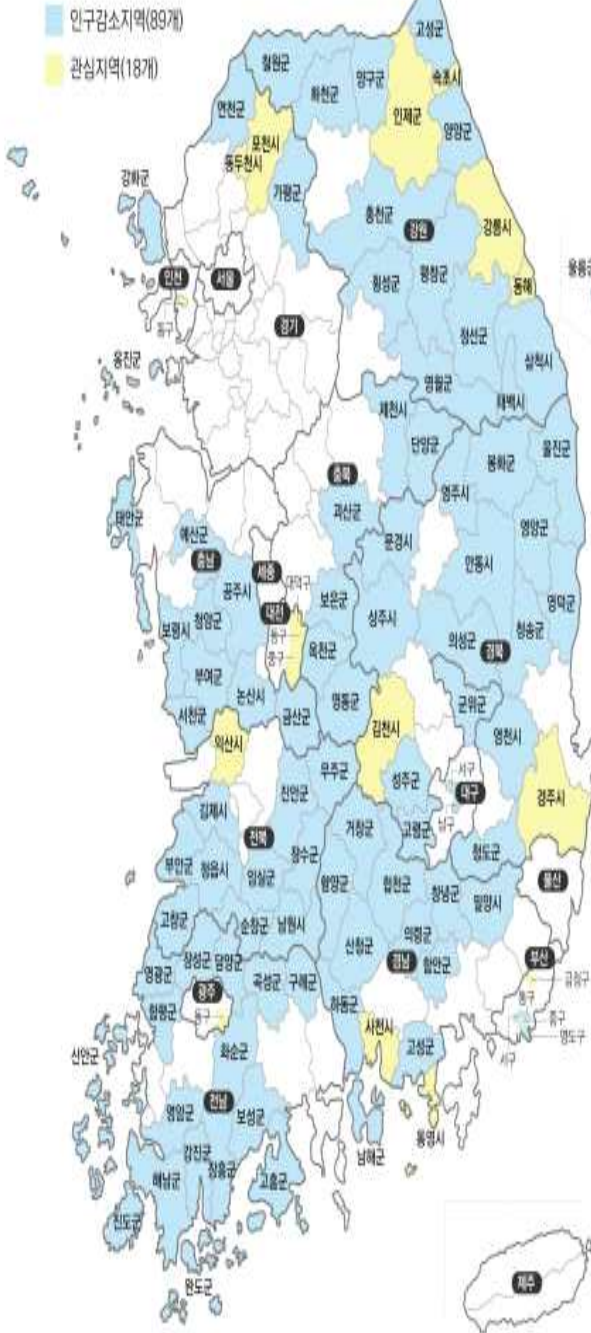
■ 지특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참고

## 세컨드홈 관련,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현황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구분	인구감소지역(89)	관심지역(18)
광역시·구·지역	총 5개 → <b>특례 배제</b>	총 7개 → <b>특례 배제</b>
	부산 (3) 대구 (2)	부산 (2) 금정구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남구 서구	- -
	-	광주 (1) 동구
	-	대전 (3) 대덕구 동구 중구
	-	인천 (1) 동구
수도권 접경 지역	총 4개 → <b>현행 유지</b> (공시가격 4억원, 취득가액 3억원)	총 2개 → <b>특례 배제</b>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경기 (2) 동두천시 포천시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 -
기타 비수도권	총 80개 → <b>지원 확대</b> (공시가격 4→9억원, 취득가액 3→12억원)	총 9개 → <b>신규 지원</b> (공시가격 4억원, 취득가액 3억원)
	대구 (1) 군위군(광역시 '군' 지역)	- -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원 (4)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북 (1) 익산시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
	경북 (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북 (2) 경주시 김천시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경남 (2) 사천시 통영시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input type="checkbox"/>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감면(5년간)</li> <li>○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3년 내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25% 감면(75만원 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25%, 한도 75만원 추가 가능</li> </ul> </li> <li>○ (일몰기한) 2028.12.31.</li> </ul>

## □ 개정내용

- 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도록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감면\*(5년간)

\* 빈집이 철거된 토지,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빈집이 철거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감면

※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모든 세대가 빈집인 경우에만 감면 적용  
- 다만, 철거 후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등에 근거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경우 감면 제외

- 빈집 철거 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유주가 빈집 철거 후 토지에 철거 3년 내에 신축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 원시 취득세 25%(+조례 25%) 감면

※ 감면 한도 75만원(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75만원 추가 가능)

## □ 적용요령

- 2026. 1. 1. 이후 빈집이 철거되는 경우부터 적용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p>제75조의6(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① 빈집(「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말하며, 공동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모든 세대가 빈집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철거 후 신축하여 취득[빈집이 사실상 철거된 날(사실상 철거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p>

개정 전	개정 후
	<p>수 있다. 다만, 추가로 경감받는 세액과 제1항에 따라 경감받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p> <p>③ 빈집이 철거된 토지,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빈집이 철거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빈집이 철거된 토지,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li> <li>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빈집이 철거된 경우</li> </ol>

#### ■ 법률 부칙

제13조(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빈집이 철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p>□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p> <p>○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 35%</li> <li>- 재산세 35%(비수도권의 경우 60%)</li> </ul> <p>○ 사업시행자의 분양 임대용 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 35%</li> <li>- 재산세 5년간* 35% (비수도권의 경우 60%)</li> <li>*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의 경우</li> </ul> <p>○ 사업시행자 직접 사용 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 35%,</li> <li>- 재산세 5년간 35% (비수도권의 경우 60%) 감면</li> </ul> <p>○ 산업단지 입주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 50%(대수선 25%) ※ 조례 +25%(대수선 +15%)</li> <li>- 재산세 5년간 35% (비수도권의 경우 75%) 감면</li> </ul> <p>○ (일몰기한) 2025.12.31.</p>	<p>□ 감면 재설계 및 감면 연장</p> <p>○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 <u>15%~50%</u> (수도권 15% 비수도권 35% 인구감소지역 50%)</li> <li>- 재산세 <u>15% ~ 60%</u> (수도권 15% 비수도권 50% 인구감소지역 60%)</li> </ul> <p>○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 <u>15%~50%</u> (수도권 15% 비수도권 35% 인구감소지역 50%)</li> <li>- 재산세 5년간* <u>15% ~ 60%</u> (수도권 15% 비수도권 50% 인구감소지역 60%)</li> <li>*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 + <u>산업용 건축물</u></li> </ul> <p>○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 <u>15%~50%</u> (수도권 15% 비수도권 35% 인구감소지역 50%)</li> <li>- 재산세 5년간 <u>15% ~ 60%</u> (수도권 15% 비수도권 50% 인구감소지역 60%)</li> </ul> <p>○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 <u>35%~75%</u>(대수선 25%) (수도권 35% 비수도권 50% 인구감소지역 75%) ※ 조례 +25%(대수선 +15%)</li> <li>- 재산세 5년간 <u>35% ~ 75%</u> (수도권 35% 비수도권 60% 인구감소지역 75%)</li> </ul> <p>○ (일몰기한) 2028.12.31.</p>

## □ 개정내용

- ① 산업단지의 지역 고용 창출 기여, 개별 공장의 사회문제 차단 등을 고려 산업단지 관련 감면을 3년 연장
- 국가 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지역을 위주로 산업단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감면을 재설계

감면대상	지역 구분	취득세		재산세	
		개정	개정후	개정	개정후
시 행 자	수도권	35%	15%	35%	15%
	비수도권		35%	60%	50%
	인구감소지역*		50%		60%
입주기업	수도권	50%	35%	35%	35%
	비수도권		50%	75%	60%
	인구감소지역*		75%		75%

\* 수도권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개정 전에는 수도권 지역에 해당

- ② 시행자의 분양·임대용 건축물의 경우 무기한 재산세 감면 대상이었으나
- 분양·임대용 토지 및 직접사용 부동산과 같이 5년간 감면 기한 설정 감면 형평성 도모

※ 산업단지 감면 항변경 사항 정리

구분	개정 전		구분	개정 후
시행자	① 산업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	시행자	① 산업단지 조성
	② 분양·임대			② 산업단지 조성 사후관리
	③ 직접사용			③ 분양·임대
입주기업	④ 산업용 건축물 및 토지			④ 직접사용
	⑤ 사후관리		입주기업	⑤ 산업용 건축물 및 토지
-	⑥ (삭제)			⑥ 취득세 조례 규정
	⑦ (삭제)			⑦ 사후관리
입주기업	⑧ 취득세 조례 규정			⑧ 종과세 제외
	⑨ 종과세 제외		-	⑨ (삭제)



## □ 적용요령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14)

- (시행자) 이 법 시행 전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종전 규정 적용
- (입주기업) 이 법 시행 전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입주협약\* 또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종전 감면 규정을 적용

\* 산업단지 입주협약을 체결하여 기업 배치 또는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을 포함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 ②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개정 전	개정 후
<p><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u></p> <p>1. <u>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u></p> <p>2. <u>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u></p>	<p><u>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u></p> <p>2. <u>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u></p> <p>3. <u>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u></p> <p>② <u>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u></p> <p>1. <u>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u></p> <p>2. <u>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u></p>

개정 전	개정 후
<p><u>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u></p> <p>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p> <p>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p>	<p><u>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u></p> <p>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p> <p>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p>

개정 전	개정 후
<p>를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p> <p>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p> <p>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p>	<p>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p> <p>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p> <p>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p> <p>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p> <p>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다만, 조</p>

개정 전	개정 후
<p><u>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u>  <u>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u></p> <p>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p> <p><u>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u>  <u>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u></p>	<p><u>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u>  <u>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u>  <u>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u>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u></p> <p>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p> <p>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p>

개정 전	개정 후
<p><u>사용하는 경우</u></p> <p>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p> <p>1. 대상 지역</p> <p>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p> <p>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p> <p>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p> <p>2. 경감 내용</p> <p>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p>	<p><u>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u></p> <p>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p> <p>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p> <p>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p>

개정 전	개정 후
<p><u>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u></p> <p><u>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u></p> <p><u>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정한다.</u></p> <p><u>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u></p> <p><u>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u></p>	<p><u>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u></p> <p><u>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정한다.</u></p> <p><u>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u></p> <p><u>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u></p>



개정 전	개정 후
<p><u>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u></p> <p>⑥·⑦ 삭제</p> <p>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p> <p>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u>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u>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u></p> <p>⑤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p> <p>1. 대상 지역</p> <p>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p> <p>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p> <p>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p> <p>2. 경감 내용</p> <p>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p>



개정 전	개정 후
	<p><u>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u></p> <p><u>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u></p> <p><u>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u>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u></p> <p><u>나.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u></p> <p><u>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u></p>

개정 전	개정 후
	<p>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p> <p>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p> <p>다.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p> <p>⑥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p> <p>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p>

개정 전	개정 후
	<p>1. <u>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u></p> <p>2. <u>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u></p> <p>⑧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 ■ 법률 부칙

제14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8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제7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해당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배치계획 또는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을 포함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29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법 §78의2)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input type="radio"/> 「산업집적법」 제45조의21제1항 제3호* 및 제5호**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35%, 재산세 50% * 공장·지식산업센터 등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매각에 관한 사업 ** 입주기업 근로자 후생복지·교육 사업 및 주택건설 사업용 부동산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u>2025.12.31.</u>	<input type="checkbox"/> 감면 재설계 및 감면 연장 <input type="radio"/> (좌 동) - <u>취득세 25%(비수도권 35%)</u> <u>재산세 25%(비수도권 50%)</u>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u>2028.12.31.</u>

### □ 개정내용

- 산업단지 개발·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감면을 3년 연장하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비수도권 차등 감면을 적용

#### < 산업단지공단 사업용 부동산 감면 재설계 >

< 개정 전 >	구분	< 개정 후 >	
취득세 35% 재산세 50%	수도권	취득세 25%, 재산세 25%	축소
	비수도권	취득세 35%, 재산세 50%	-

### □ 적용요령

- 2026. 1. 1. 부터 시행(부칙 §1)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78조의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21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1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8조의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 ----- ----- ----- ----- ----- ----- ----- -----1 00분의 3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100분의 5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2028년 12월 31일-----. ----- ----- -----.

#### ■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30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연장(법 §81)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이전공공기관의 부동산 및 법인등기 감면 ○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0% (5년간) ○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 (일몰기한) <u>2025.12.31.</u>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 (좌 동) ○ (좌 동) ○ (일몰기한) <u>2028.12.31.</u>
<input type="checkbox"/> 이전공공기관 등 이주직원 주택 감면 ○ (감면대상자) - 이전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9.12.31.이전 소속 공무원 ○ (감면대상) 이전지역 거주 목적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 전용면적 85㎡이하 : 면제 -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 75% 감면 - 전용면적 102㎡초과 : 62.5% 감면 ○ (일몰기한) <u>2025.12.31.</u>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 (좌 동) ○ (좌 동) ○ (일몰기한) <u>2028.12.31.</u>

## □ 개정내용

-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진 및 국가 정책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방세 감면기한 3년 연장

## □ 적용요령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부칙 §1)

## ②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u>2025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u>2028년 12월 31일</u> ----- ----- ----- ----- ----- -----.
②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② -----



개정 전	개정 후
대해서는 <u>2025년 12월 31일</u> 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u>2028년 12월 31일</u> -----.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감면한다.	③ ----- ----- ----- ----- ----- ----- <u>2028년 12월 31일</u>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p>□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p> <p>○ (미집행)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 중, 용어 정의는 없으나 <u>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u> 미집행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운영 중</p> <p>○ (감면대상) 도시·군계획시설·공공시설로서 <u>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그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u>에만 감면</p>	<p>□ 감면대상 등 정비</p> <p>○ <u>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포함)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u> 감면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화</p> <p>- <u>도시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u> 감면 제외</p> <p>○ 다른 법률에 따라 <u>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u>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 <u>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에도</u> 감면대상에 포함</p>

## □ 개정내용

## ① ‘미집행’의 범위 명확화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포함)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로 정의
-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부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되지 아니한 경우 ‘미집행’에서 제외

② 국토계획법 뿐만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관리계획의 결정이 간주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관리계획의 결정이 간주되는 경우\* 지형도면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형도면 고시 근거도 보완

\* 도시정비법 §16②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 포함)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 포함)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 적용요령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부칙 §1)

-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 ②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개정 전	개정 후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u>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u> ----- ----- <u>---주택의 경우 각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u> ----- -----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u>&lt;신 설&gt;</u>	② ----- ----- ----- ----- <u>제30조에 따른</u> ----- <u>및 같은</u> <u>법 제32조에 따른 도시</u> ----- -----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집행”이란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u>

개정 전	개정 후
<p>③ (생략)</p>	<p>를」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당 신청을 통해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 ■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3항,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8조제4항, 제63조제2항·제3항, 제75조의2제1항·제3항, 제75조의4제2항, 제78조의2 본문,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5조 및 제18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3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법 §85의2)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지방공사 등의 목적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input type="radio"/> 지방공사 - 취득세·재산세 50%  <input type="radio"/> 지방공단 - 취득세·재산세 면제  <input type="radio"/> 지방출자·출연기관 - 취득세·재산세 50% ※ (실제 감면율) 감면율 × 지자체 투자비율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u>2025.12.31.</u>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감면 연장  <input type="radio"/> (현행과 같음)  <input type="radio"/> (현행과 같음)  <input type="radio"/> (현행과 같음)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u>2028.12.31.</u>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규정 신설  <input type="radio"/> 취득일부터 1년 경과시(건축물 신축시 해당 토지는 2년)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input type="radio"/> 직접 사용일부터 2년 미만에 매각·증여 또는 타 용도 사용

### ☐ 개정내용

- 교육·문화 진흥 등 주민복지 증진 지원 및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감면 연장

- 기존 일반적 추정규정 외 추정규정을 신설하여 사후관리 합리화
  - 취득일부터 1년 경과시(신축시 해당 토지는 2년\*)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 신축의 경우에 한하여 비교적 공사소요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2년으로 규정
  - 직접 사용일부터 2년 미만에 매각·증여 또는 타 용도 사용시 추정

## □ 적용요령

- '26. 1. 1.부터 시행
- 제85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부칙§4)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2025년 12월 31일</u> (제4호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u>2028년 12월 31일</u>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단”이라 한다)에 대해서	② ----- ----- -----

개정 전	개정 후
<p>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지방세를 감면한다.</p> <p>1. ~ 3. (생략)</p> <p>③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이하 이 항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지방세를 경감한다.</p> <p>1.·2. (생략)</p> <p><u>&lt;신설&gt;</u></p>	<p>----- -----<u>2028년 12월 31일</u>-----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u>2028년 12월 31일</u>----- -----.</p> <p>1.·2. (현행과 같음)</p> <p>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u></p> <p><u>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u></p> <p><u>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u></p>



개정 전	개정 후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 용하는 경우

■ 법률 부칙

제4조(감면 지방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4호·제5호 및 제85조의  
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 주민의 공동소유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주민의 공동소유 선박 - 취득세 면제 ○ (일몰기한) <u>2025.12.31.</u> ○ 주민세 <small>사업소분·종업원분</small> 면제 ○ 사후관리 규정 - 5년 이내 수익사업 사용 - 1년 이내 직접 미사용 - 직접 사용 2년 이내 매각·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감면 세목 확대 ○ (현행과 같음) ○ 재산세 등 감면 신설 - 취득세, <u>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u> 면제 ○ (일몰기한) <u>2028.12.31.</u> ○ 주민세 <u>감면 종료</u> ○ 사후관리 완화 - (좌동) - 1년 이내 직접 미사용( <u>단, 신축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2년</u> ) - (좌동)

☐ 개정내용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지원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을회관 등 주민의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 소외 도서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양식장 등 해양환경개선 지원을 위하여 마을회 선박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 감면세액이 미미한 점 등 감면효과성을 고려하여 주민세 감면 종료
- 신축의 경우 비교적 공사소요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사후관리를 합리화

## □ 적용요령

- '26. 1. 1.부터 시행(부칙§1)
-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90조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부칙§12)
- 제90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12)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 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 득세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면 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 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u>2028년 12월 31일</u>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 터 <u>1년</u> 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 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	2. ----- --- <u>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 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 에 대해서는 2년)</u> ----- -----

개정 전	개정 후
<p>3. (생 략)</p> <p>② 마을회등이 소유한 <u>부동산에</u>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u>지역자원시설세를, 마을회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u>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② -----<u>부동산 및 선박</u>----- ----- ----- -----<u>지역자원시설세를</u> <u>2028년 12월 31일</u>----- -----. ----- ----- ----- -----.</p>

#### ■ 법률 부칙

제18조(마을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9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90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34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조문 정비(법 §167의3)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 납부서 발송 인용조문 (「지방세법」 제95조제4항)	<input type="checkbox"/> 인용조문 변경 반영 ○ 납부서 발송 인용조문 (「지방세법」 제95조제5항) ※제4항 신설에 따라 제5항으로 이동

### ☐ 개정내용

- 납부서 발송 근거조항 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 인용조문 정비(지방세법 §95④ → §95⑤)

### ☐ 적용요령

- 2026. 1. 1. 부터 시행(부칙 §1)
- ※ 인용조문을 단순 정비 한 것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67조의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 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략)	제167조의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 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② -----제95조제5항----- -----

개정 전	개정 후
장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 ----- ----- ----- -----.

■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p>□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인구감소지역에 본·지점 등이 소재하는 법인</li> <li>○ (적용요건)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시점에 해당 기업 소재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둔 사람</li> </ul> </li> <li>○ (적용내용)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 70만원)을 고용하여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감면</li> <li>○ (일몰기한) 2028.12.31.</li> </ul>

## □ 개정내용

- 인구감소지역에 본점·지점·사업장 등이 소재하는 법인이 ①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을 ②상시 근로자\*로 고용하여 ③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고용하여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감면
- \* (대통령령)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단기간·단시간 근로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친족 등 제외

##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부터 적용(부칙 §15)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p><u>제167조의5(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u></p> <p>① 기업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고용일 직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로 고용하고 고용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 수에 45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 ■ 법률 부칙

제 15조(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p>제116조의3(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p> <p>① 법 제16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li> <li>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li> <li>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li> <li>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li> <li>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li> <li>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li> <li>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li> </ol> </li> </ol>

개정 전	개정 후
	<p><u>보험료</u></p> <p>② 법 제167조의5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기업은 같은 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에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별 근로계약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세액공제를 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p>제9조의2(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6조의3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말한다.</p>

■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관련 신설 서식(별지 제6호의5서식)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청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중소기업 여부	
		[ ] 여	[ ] 부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	---	-----

####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별 명세

근무지 소재 인구감소지역	성명	생년월일 (YYYYMMDD)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작일 (YYYYMMDD)	근로계약 체결일 (YYYYMMDD)	근로기간 (YYYYMMDD~YYYYMMDD)	1년 이상 근무 여부
					~	[ ] 여 [ ] 부
					~	[ ] 여 [ ] 부
					~	[ ] 여 [ ] 부
					~	[ ] 여 [ ] 부
					~	[ ] 여 [ ] 부
					~	[ ] 여 [ ] 부

#### 세액공제액 계산

구분	인원 수	1인당 공제금액	세액공제액 (인원 수 × 1인당 공제금액)
중소기업		70만원	
중소기업 외		45만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별 근로계약서 2.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3. 그 밖에 세액공제를 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작성방법

1.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별 명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중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별 명세를 적습니다.
2. 근무지 소재 인구감소지역: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인구감소지역의 명칭을 적습니다.
3.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작일: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가 근무지 소재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둔 날짜(근로계약 체결일 전에 주소를 둔 날짜 중 가장 최근의 날짜를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4. 근로계약 체결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습니다.
5. 1년 이상 근무 여부: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 36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법 §167의6)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input type="radio"/>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국세) 분리과세 적용 시 개인지방소득세도 분리과세(세율 1.4% ~3.0%) 적용되도록 과세특례 신설 <input type="radio"/>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내용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분리과세 적용시 개인지방소득세도 분리과세 적용되도록 과세특례 신설

####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요 내용(조특법) >

- (적용대상)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① 또는 ② 충족 법인
  - ① 배당성향 40% 이상
  - ②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 증가
- (적용세율) 4단계 누진세율

구간	세율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 □ 적용요령

- 거주자가 이 법 시행(2026. 1. 1.)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부칙 §16)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67조의6(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라 특례배당소득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 ■ 법률 부칙

제16조(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6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 37 중과세율 적용 배제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법 §180의2)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중과적용 배제특례 ○ 리츠, 부동산펀드, PFV의 경우 취득세 대도시 중과 배제 ○ (신 설)	<input type="checkbox"/> 추정규정 신설 ○ (현행과 같음) ○ <u>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과를 적용하여 감면분 추정</u>

### ☐ 개정내용

- 취득시 중과배제 요건을 충족하여 특례를 적용받은 후 중과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 부재
  - ※ PFV(페이퍼컴퍼니)가 부동산 취득시에는 중과 배제 특례를 적용 받고 이후에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더라도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추정 불가(조심 2023지1659)
-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 배제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였으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게 되는 경우 감면(중과 배제)분 추정
  - ※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함]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지방세법 §20③)

###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026. 1. 1.)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17)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생략) <u>&lt;신설&gt;</u>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부 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 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법률 부칙

제17조(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8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신 설)	□ 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 신설 ○ 위탁자가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 시 감면 적용 - 수탁자(소유)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실질 지배·통제하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 ※ 실질 지배·통제하는 경우 시행령 위임 ○ 그 외의 신탁은 수탁자가 사용하는 경우 감면

## □ 개정내용

- 감면 요건을 갖춘 위탁자가 부동산을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인 수탁자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취득세 감면 적용
- (직접 사용 예외)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용” 정의 규정에서 소유자의 범위에 법 제185조에 따른 위탁자\* 추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의 위탁자

- ①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 이행 완료
-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담보신탁)

- (감면 적용 특례)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개발·조성 및 건축한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더라도 감면 요건 충족여부 판단 시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적용

※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 적용요령

- 2026. 1. 1. 부터 시행(부칙 §1)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
1. ~ 7. (생략)	1. ~ 7. (생략)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8. ----- ----- ----- -----수탁자 및 이 법 제185조에 따른 위탁자----- ----- ----- ----- ----- ----- -----.
8의2. ~ 14. (생략)	8의2. ~ 1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185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개정 전	개정 후
	<u>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개발·조성 및 건축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u>

■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u>&lt;신 설&gt;</u>	<u>제128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법 제18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이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을 말한다.</u>

■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9 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 특례 신설 (법 §186)

###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신 설	□ 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 특례 신설 ○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제외되더라도 특정 요건 충족 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재산세 감면 및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적용

### □ 개정내용

- 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감면을 예상하고 투자한 납세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특례 규정 신설

\*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12의2)

- (취득세) 인구감소지역 소재 부동산을 매매계약 체결 또는 착공 등을 한 경우라면 취득 시 인구감소지역으로 보고 감면을 적용

- (재산세)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부동산 등에 대해 잔여 감면기간(재산세 5년간 50% 등) 동안 재산세 감면을 지속 적용

※ ①매매계약 체결 당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부동산, ②착공 당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토지에 건축한 주택·건축물, ③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부동산

- (법인지방소득세) 고용 당시에는 인구감소지역이었으나 고용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인구감소지역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공제(§167의5) 적용

###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2)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p>제186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등에 각각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매매계약 체결(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당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부동산</li> <li>2. 착공 당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토지에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li> </ol>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등에 각각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부동산</li> <li>2.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부동산</li> </ol> <p>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보아 제167조의5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공제를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67조의5제1항에 따라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고용일 직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주</li> </ol>

개정 전	개정 후
	<p><u>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로 고용하고 고용일로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u></p> <p>2. <u>해당 지역이 고용 당시에는 인구감소지역이었으나 고용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인구감소지역이 아니게 된 경우</u></p>

■ 법률 부칙

제2조(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 중략 … 제18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감면대상 청년농업법인 기준 ○ 대표자가 법인 설립 당시 <u>15세 이상 34세 이하인</u> 사람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연령기준 완화 ○ 대표자가 법인 설립 당시 「 <u>후계청년농어업인법</u> 」에 <u>따른 청년농어업인에</u> 해당하는 사람

☐ 개정내용

- 청년농업법인의 대표자 연령기준 요건을 현행 15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청년농어업인의 연령기준(40세 미만)으로 완화

※ 「후계청년농어업인법」의 청년농어업인 연령기준과 일치시켜 정책 간 정합성 제고

☐ 적용요령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부칙 §1)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 ② (생 략) ③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 업법인”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법인을 말한다. 1. 법인 설립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조세특례제 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 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 년을 한도로 한다)을 법인 설립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생 략)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법인 설립 당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농업인으로 한정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2. (현행과 같음)

#### ■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1 기회발전특구 등의 감면 대상 공장 범위 재설계(규칙 §8, §8의2)

###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input type="checkbox"/> 감면 대상 공장의 범위  <input type="radio"/> (업종)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공장 범위 재설계 및 명확화  <input type="radio"/> (업종)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모든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개정내용

- (현황) 과밀억제권 공장 지방 이전(법 §80), 기회발전특구로 공장 이전 또는 특구 內 공장 신·증설(법 §80의2) 시 지방세 감면 中
  -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위임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 대상 제조업 인용
- (개선) 업종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과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으로 명확화

### □ 적용요령

- 이 규칙 시행(2026.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제조업과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옥외 기계장치 및 저장·공급시설(석유·석탄·가스·증기·냉방공기 등 저장·공급 시설) 포함

※ 기회발전특구 內 가스 제조·공급업, 증기 및 냉방공기 공급업 등으로 이용되는 LNG 저장시설은 감면 대상에 해당(ex: 울산 남구, 충남 서산, 전남 여수 등)



##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u>공장</u> 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제8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 <u>한국표준산업분류</u> ”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과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하기 위한 <u>공장</u> ----- -----. -----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생략)	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② -----

개정 전	개정 후
<p>부분 후단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p> <p>③ (생 략)</p> <p>④ 법 제8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 등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을 신설하거나 증설(증설 후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된</p>	<p>----- ----- ----- <u>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과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하기 위한 공장</u> ----- ----- ----- ----- ----- ----- -----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과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하기 위한 공장</u> ----- ----- -----</p>

개정 전	개정 후
<p>경우의 증설을 말한다)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p> <p>⑤·⑥ (생략)</p>	<p>----- -----. ----- ----- ----- ----- ----- --.</p> <p>⑤·⑥ (현행과 같음)</p>

#### ■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 2. (생략)

② 수도권(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및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수도

권에서 이전하기 전에 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본점, 주사무소,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하는 경우

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③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공장을 신설·증설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공장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

1. 식료품 제조업      2. 음료 제조업      3. 담배 제조업      4. 섬유제품 제조업
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5. 1차 금속 제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9. 전기장비 제조업      2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3. 가구 제조업      24. 기타 제품 제조업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6. 수도사업
27. 비금속광물 광업      28.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종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종과세하는 경우, 법 제146조·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종과세하는 경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 가.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 나. 먹는 물이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 다.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수리업**
- 라. 연탄의 제조·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탄제조업**
- 마. **얼음제조업**
- 바. **인쇄업**.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에 한정한다.
- 사.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
- 아.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를 포함한다)

### 참고3

### 현행 업종과 한국산업분류표상 제조업 업종 비교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2 업종		한국산업분류표 상 제조업
제조업	1. 식료품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2. 음료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3. 담배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4. 섬유제품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5. 1차 금속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9. 전기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3. 가구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4. 기타 제품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비제조업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6. 수도사업(수도업)	
	27. 비금속광물 광업(광업)	
	28.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개인서비스업)	

## ■ 산업집적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다만, 건축물의 일부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 소유 또는 임차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본다.

##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건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 라. 「소음·진동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 6의2. 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다)
7. 식당(「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제품전시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또는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나.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에 해당하는 제품판매장(「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 1)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이나 이와 결합된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 2) 해당 공장에서 연구·개발하고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 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설치·조립·축조하는 등의 공사로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사무실
- 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곤충가공업을 하기 위한 공장에서 곤충가공의 제조공정에 원료 또는 재료로 전량 사용되는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
- 8의2.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9.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Ⅲ. 참 고 자 료**



## 2026년 지방세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

	감면내용	조문	세 목		적용시기
			취	재	
1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19	○	○	'15.1.1.
2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21	○	○	
3	한국농어촌공사(경영회생 지원 환매취득)	§13②2	○		'16.1.1.
4	노동조합	§26	○	○	
5	임대주택(40㎡ 이하, 60㎡ 이하)	§31①1,②1,④1	○	○	
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40㎡ 이하)	§31의3①1	○	○	
7	행복기숙사용 부동산	§42①	○	○	
8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44의2	○	○	
9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45①	○	○	
10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52①	○	○	
11	한국자산관리공사 구조조정을 위한 취득	§57의3②	○		
12	경차	§67②	○		
13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 주택 (85㎡ 이하)	§81③2	○		
14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	§83①	○		'17.1.1.
1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갯생보호시설	§85①	○	○	
16	내진설계건축물(대수선)(‘21년까지 적용)	§47의4①2	○	○	
17	국제선박	§64①,②,③	○		
18	매매용 중고자동차	§68①	○		
19	수출용 중고자동차	§68③	○		'18.1.1.
20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21년까지 적용)	§13②1의2호		○	
21	농협·수협·산립조합의 고유업무부동산	§14③	○	○	
22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기관	§45의2	○	○	
23	신협·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부동산 등	§87①,②	○	○	
24	지역아동센터	§19의2	○	○	
25	창업중소기업(창업후 3년내) 재산세	§58의3		○	'19.1.1.
26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22의2	○		
27	학생실험실습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등	§42②	○	○	

	감면내용	조문	세 목		적용시기
			취	재	
28	문화유산·자연환경 국민신탁법인	§53	○	○	
29	공공기관 상법상회사 조직변경	§57의2③7	○		
30	부실금융기관 등 간주취득세	§57의2⑤	○		
31	학교등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	§60③1의2호		○	
32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 주택(85㎡↓)	§74④3	○		
33	법인의 지방이전	§79①	○	○	
34	공장의 지방이전	§80①	○	○	
35	시장정비사업(입주상인)	§83②	○		
36	평택이주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81의2	○		
37	사회복지법인	§22①,②	○	○	'20.1.1.
38	별정우체국	§72②		○	
39	지방공단	§85의2②	○	○	
40	새마을운동조직	§88①	○	○	
41	정당	§89	○	○	
42	마을회	§90	○	○	
43	수소·전기버스	§70④	○		
44	장학단체 고유업무 부동산	§45②1	○	○	
45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조특법 적용대상은 제외)	§78의3	○	○	
46	생애 최초 주택	§36의3①1	○		'20.7.10.
47	전공대학 ('23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	§44②	○	○	'21.1.1.~ '22.12.31.
48	농협 등 조합간 합병	§57의2②	○		'21.1.1.
49	농협·수협조합의 부실조합 재산 양수 등	§57의3①	○		'22.1.1.
5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재취득	§57의3④	○		
51	한국자유총연맹	§88②	○	○	
52	반환공여구역내 창업용 부동산	§75의4	○		'23.1.1.
53	인구감소지역내 창업용 부동산	§75의5	○	○	
54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 취득	§47의4①	○		'25.1.1.
55	지방농수산물공사	§15②	○	○	'26.1.1.
56	도시철도공사	§63⑤	○	○	'29.1.1.

